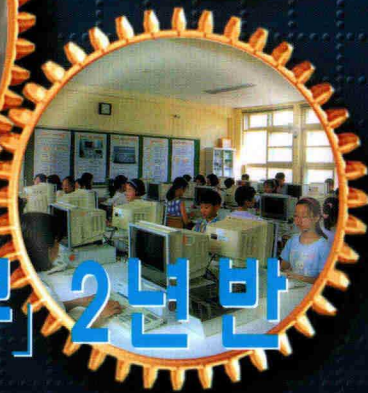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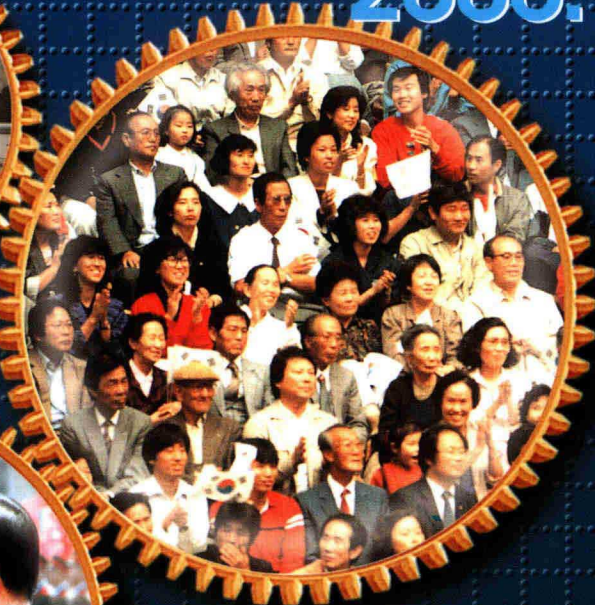


나라경제

2000.9



특집 / 「국민의 정부」 2년 반 -성과와 향후 과제

정
책
해
설

2단계 기업구조개혁 추진
한·중 어업협정 정식서명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강화

◀ 이 달의 초점 ▶ 경기, 하강국면인가 조정국면인가

나라경제

2000년 9월호
통권 제118호



2000년 8월호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 4 권두칼럼 개혁주의의 딜레마/신일철 · 고려대 명예교수
- 6 만만금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만든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 VS 박명진 서울대교수

특집

「국민의 정부」 2년 반-성과와 향후 과제

- 12 「국민의 정부」 1기의 성과와 과제/이철환 · 재정경제부
- 16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운용 방향/한성택 · 재정경제부
- 20 통계로 본 「국민의 정부」 2년 반/김문수 · 재정경제부

이 달의 초점 경기, 하강국면인가 조정국면인가

- 26 조정국면으로서 정상적 흐름이다/이희수 · 재정경제부
- 30 경기가 하강국면이다/정한영 · 한국금융연구원
- 33 경기, 하반기 이후 하강국면 진입/이승명 · 현대경제연구원

나라경제 포커스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

- 37 국채 축소·지반영된 추경안/고영선 · 한국개발연구원
- 42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이계용 · 보건복지부

경제수상

- 46 '창조적 파괴' - 개혁/정학수 · 농림부
- 48 안전한 바다를 위하여/서정호 · 해양수산부

- 51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박선영 · 세계일보 기자

- 56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홍선기 대전광역시장
62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로 떠오르는 대전**/장동만 · 대전광역시
66 **공공부문 경영혁신** '인간·정보·환경 하이웨이 2000'
/고재석 · 한국도로공사

경제 정책해설

- 70 **2단계 기업구조개혁 추진**/장건상 · 재정경제부
75 **한·중 어업협정 정식서명**/손재학 · 해양수산부
79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강화**/정연만 · 환경부
83 **최저임금제, 전사업장으로 확대**/정현옥 · 노동부
87 **IMT-2000 사업자 선정**/이기주 · 정보통신부
92 **전력산업 구조개편 위한 한전 민영화**/문제도 · 산업자원부
96 **심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위한 기반 구축**/문해남 · 해양수산부
101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여형구 · 건설교통부
- 105 **기업정보** 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전망(II)/주순식 · 공정거래위원회
109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송재희 · 중소기업청
- 113 **경제동향** 동남아 금융시장 불안-배경과 전망/권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7 **나라경제 광장**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성적은?/김영식 · 과학기술부
121 **경제만화** 공정해 女史의 알기 쉬운 공정거래(I)/공정거래위원회
128 **한국경제에 관한 외신보도 동향**
- 136 **주요 경제지표**



만남 :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 VS 박명진 서울대학교수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KDI 경제정보센터

발행인/이진순 · KDI 원장

편집인/이철환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단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이가복 ·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교통상부/이현주 · 통상정보지원팀장
과학기술부/이만기 · 정책총괄과장
농 립 부/조규담 · 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진 흥 ·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정경원 ·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이계용 · 기획예산담당관
환 경 부/노부호 · 정책총괄과장
노 동 부/남석현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이재영 ·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김성진 · 기획예산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주순식 · 총괄정책과장
기획예산처/반장식 · 예산제도과장
금융감독위원회/박환근 · 기획과장
KDI 경제정보센터/조병구 · 연구위원

편집간사/백우진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집장/김인철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이기덕 · 원동엽 · 이지은

업무/안의일

표지 디자인/예 진

일러스트/오진목

인쇄/유성사

나라경제 · 2000년 9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1권 제9호
(통권 제118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KDI 경제정보센터

13000-01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00-6500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 113

대표전화 (02)958-4114 · FAX (02)3295-0748

홈페이지 주소 : <http://epic.kdi.re.kr>

인터넷 e-mail : nara@kdiu.kdi.re.kr

관리인: kcee

기사문의 : (02)958-4632, 4634~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27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개혁주의의 딜레마

신 일 철

고려대 명예교수
(shin@ybmsisa.co.kr)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물질에 관한 과학의 지성과 생명에 대한 直觀知를 구별하고 과학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 예가 수영술이다. 우리는 물 밖에서 수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수영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시골 어린이들이 갯물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다 보면 수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베르그송은 머리로 아는 理性知 이외에 생명의 직관이 따로 있고 오히려 이성보다 직관이 더 근본적이라고 역설했다.

한국경제의 연구개발에서도 머리로 만들어내는 지성 위주에 머물다 보면 21 세기의 경제 수영술은 터득하지 못한다. 남북한간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 경제가 단연 우위인 것은 국민 총생산비 등의 수치보다는 시장경제의 체험적 자본을 많이 가진 점이다.

오크 쇼트라는 영국의 정치학자는 정치의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정치는 그 근본이 '경험'이라고 했다. 수많은 갖가지 사태에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가운데서 생긴 경험과 그런 경험의 소유자에게 중요한 정책 결정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IMF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많은 개혁과 제에 눈뜨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중앙명령은 대단히 우렁찬데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을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피곤증'에 걸렸다고 한다. 官주도의 개혁에는 民이 개혁당한다는 느낌에서 피곤

증이 오게 마련이다. IMF 직후 새정부 가 '작은 정부'와 시장원칙을 내세워 국민들은 관 자체의 자기 개혁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어느덧 중앙 계획·중앙명령의 진보주의 정서가 커지면서 '큰 정부'론이 불가피하다는 반전이 생긴 것 같다. 人治에서 法治로의 근본개혁은 기대난망인가.

정권교체가 있는 정당정치에서 개혁주의는 아당적 슬로건주의를 탈피

하고 집권당다운 실무행정적 사고로 전환되지 못했을 때 대개 국민의 인기와 갈채를 그 평가척도로 삼게 되는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그 개혁의지가 진보주의 정서에 사로잡혀 정책결정과 집행의 요직 인선에서도 개혁성향을 너무 선호하다 보면 아마추어리즘에 빠지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21 세기의 신시장세계를 헤엄쳐 나가려면 '청사진' 형태로 발상하는 이데올로기적 이념형에서 벗어나 시장적 사고로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진보주의의 개혁은 태초에 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청사진인 '로고스'를 미리 마련하고 있었다는 神人同格의 이성주의 전제 속에서 있었다. 이런 개혁 청사진이 있고 보면 온갖 반개혁적 저항을 힘으로 억누르고 관철해야 한다는 중앙지령주의에 빠지게 되고 오크 쇼트적 '경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성숙한 개혁의 정책적 사고는 이성과 경험

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 그 개혁안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힘의 강요 없이는 통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경험'의 충고를 경청하여 그 정책 '운전'에서 브레이크도 거는 결단이 바로 시장적 사고이다. 우리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시장을 외면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것은 한 기업의 생존도 그 수장의 중앙명령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욕구와 아이디어가 반영된 시장적 질서에 따르라는 것이 된다.

깊이 들여다보면, 근대적 시장가격은 살아있는 경제의 신호이며 훌륭한 정보시스템이다. 구소련 등에서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관의 행정명령이 시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급진적 개혁을 감행한 결과 큰 재앙을 가져왔다. 70년대에 들어서서 당관료주의와 중앙지령의 오류를 뒤늦게 깨달은 브레즈네프는 '현장주의'를 내걸었다. 이로써 이데올로기의 진보 '청사진'이 퇴장하면서 경제현장의 '노하우'를 되살려보려고 했으나 정작 現場知 존중으로의 근본적 발상전환이 없어 실효가 없었다. 그것은 야구 해설자와 야구선수를 혼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야구해설자를 실전에 내보내면 꼭 승리한다는 착각이 개혁주의의 또 하나의 딜레마이다.

사실 야구선수의 현장지는 기업가, 실무정책가의 앞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적인 이성지보다는 몸으로 부딪쳐 실천에서 얻은 경험지이다. 거기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되고 안된다는, 시행착오 과정의 오류제거의 점진적 과정의 실사구시적 '感'이 주도하는 것이지 체육학에서 배운 가장 진보된 야구이론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개발에서도 '창조주 같은 청사진'의 제시보다는 급선무의 당면문제부터 착수하여 대담한 가정을 내놓고 그것을 거듭 반증해 보는 탐구에서 얻은 반증적 가설의 점진에 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책의 연구개발에서도 우리는 후발개발국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국경제 특유의 현장적 경험과의 토론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혁주의의 딜레마를 피할 수 없다.

탈냉전 '이데올로기 종언'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많은 정보·지식을 소화할 판단

력 피로와 특히 그 의미의 결핍증에 걸려 있다. 냉전형 이데올로기는 선전선동적인 구호를 내세워 거시적 의미부여로 대중적 매력을 가졌었다. 우리는 지금 한국경제에 대한 많은 정보·지식을 눈앞에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포괄적으로 개념적 총괄을 해주는 '의미'에는 빈곤하다. 연구개발은 대개 그 위층에서 그 연구에 선행하는 이해관심이나 개혁의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그 구조상 가치 중성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론적 청사진형인 개혁이념에 대해 베른슈타인은 "사회나 경제정책의 궁극목표 따위는 없다", "과정이 전부이다"라고 급진적 변혁지향의 마르크스주의에 저항하며 수정주의의 시조가 되었다. 최종적인 사회진보의 궁극목표를 내걸어 이데올로기적 의미부여를 해온 진보주의적 정서도 종언되고 있다.

오늘의 탈이데올로기의 21세기형 '의미'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 할까. 그런 직관지가 있다면 그 대표적 예는 폴 케네디의 「대국의 흥망」(1987)이 아닐까 싶다. 전후 미국경제의 건잡을 수 없는 하강에 대해 폴 케네디는 오늘의 미국경제 호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지적 경고를 해주었다. 폴 케네디는 그의 역사가다운 세계사적 직관을 가지고 '의미' 부여의 정책적 사고의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된다. 허구 많은 연구소와 넘쳐나는 정책 연구의 홍수 속에서 굳게 일하 같은 계시의 목소리 「대국의 흥망」의 한국적 정책직관, 그런 발상전환을 대망해 본다.

반면에 에즐리 포겔의 「Japanese NO.1」 따위의 인기영합적 레토릭은 이미 꺼지기 시작한 일본경제 거품에 대한 구조조정의 경고마저 외면케 한 '무의미'의 센세이션적 소동으로 많은 해독을 끼쳤다. IMF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의 경제평론이 '정실자본주의'라는 뼈아픈 경고를 한 것 역시 '의미'의 경제평론이라 할 수 있다. 良藥은 입에는 쓴 법이다.

도대체 지난 2년여에 걸친 개혁피곤증 증후군의 진단은 무엇이며, 개혁된 미래상의 장미빛 꿈에 앞서 오늘의 한국경제의 현황에서 진정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의 '의미'의 계발적 정책 직관이 더욱 아쉽다. ■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만든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

대담: 박명진/서울대 교수

• 때: 2000년 8월 22일 • 곳: 정보통신부장관 집무실



“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은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정보화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창출·유통·활용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



— ‘디지털 혁명’에 의한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장관 취임 후 6개월 동안 느끼셨던 소감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 국민들의 초고속통신서비스·인터넷에 대한 열의를 피부로 느끼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99년말 1천만명을 돌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1,5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2002년까지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임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 지식정보강국을 실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99년말 현재 시내·외 전화 국간을 연결하는 기간망은 100% 광케이블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 재원을 투자하는 초고속국가망은 144개 지역 중 107개 지역에 광케이블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올해 안으로 전국적인 데이터 통신망의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입자망은 광케이블, ADSL·CATV모뎀 등 다양한 기술방식으로 구축중이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가입자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87만명으로 8월중에 당초 연말 목표였던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지식정보사회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고속 유무선 복합 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



한 것이 국민의 정보화 능력인데
요,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정부는 99년 3월 ‘국민정
보화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대
통령 주재 정보화 전략회의를 통
해 범정부 차원의 ‘1천만명 정보
화교육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화교육의 파급 효과
가 큰 학생·군인·공무원 등에
대한 집중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국방부와 공동으로 150개의
군부대 내에 정보화 교육장을 구
축하고, 원격교육 시스템 등을 통
해 공무원 정보화교육도 강화
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1만1,139개 초·중·고
교에 올해부터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하
였습니다. 또한 수업시간
이외에는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인터넷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인
터넷 교육 및 활용의 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하
였습니다.

—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배
려도 중요합니다. 정보격차 해소
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
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 정부는 정보격차 문제를 만
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현안
사항으로 정하고, ‘정보격차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먼 지역까지 정보접
근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
다. 우선 8개 지역에서 시범 사

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주부·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은 2000년 3월부터 시작하
여 6월까지 21만명에 대해 교육
을 실시하였고, 7월부터는 EBS
방송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교육
을 실시중입니다. 2002년까지
200만명의 주부를 교육한다는
구상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은 2002년까
지 10만명을 목표로 전국 200여
개의 공공·민간 컴퓨터 교육기
관을 통해 7월부터 인터넷교육
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보호 소
년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대상
별 수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추진중입니다.

— 올해 정보통신업계의 최대
이슈는 IMT-2000 사업자 선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정책 방향
을 발표하셨는데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어
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 후생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MT-2000 사업자 선
정 정책도 무선 인프라를 값싸게
중복투자를 방지하면서 구축하
고, 경쟁을 촉진하면서 양질의 서

비스를 놓어준 지역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과 ‘심사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도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학회·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과까지도 공개하여 공개행정·투명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MT-2000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산업적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IMT-2000 사업은 많은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2~2010년까지 고용창출효과는 약 42만~55만명, 생산유발효과는 약 38조~4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1조~3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내 IMT-2000 표준방식을 복수표준으로 결정하여 단일표준시 기술고립의 위험성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MT-2000 기술 개발은 동기식의 경우 97년부터 99년까지 총 570억원(정부 25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여 현재 국내업체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C-1X의

경우 올해말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비동기방식은 1999년부터 기술 개발에 착수하여 2001년까지 총 1,312억원(정부 52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정부는 핵심기술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기술은 산업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첨예합니다. 우리나라가 생존의 차원을 넘어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국가는 계속 앞서 가고 그렇



대담자 박명진 서울대학교 교수

지 못한 국가는 계속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은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창출·유통·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과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가와 기업·개인이 뜻을 모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역량과 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1기의 성과와 과제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30년 이상의 정부주도형 고속 성장과정에서 비롯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경제 전체에 부실이 누적된 상태였다. 또한 경제 내부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시장규율에 의한 보상과 책임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도 곳곳에 만연해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

그러한 가운데 97년 1월 한보를 시작으로 삼미·진로·대농·기아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이어졌고 이는 곧 대량 실업 문제를 초래하였다. 한편, 극심한 경기침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97년 1만달러에서 98년에는 절반수준인 6,700달러로 감소하였고, 중산·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여기에다 국제수지적자가 누적되어



이철환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심각한 외환유동성 부족문제까지 초래되었다. 외환보유고는 39억 달러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내었고, 96년 12월말 1달러당 844원 이던 환율이 97년 말에는 1,965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국가신인도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고, 심각한 외환유동성 부족을 맞게 된 우리 정부는 97년 11월 21일 마침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의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

여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즉, 당면한 경제위기가 직접적으로는 외환유동성 부족에서 출발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이라는 국정운영 기조하에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산적 복지시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뒷받침하였다.

그 결과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장·고용·물가·경상수지 등의 모든 거시경제지표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IMF·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도 이러한 경제성공과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

를 이끌어 낸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동참노력 그리고 정부의 시의적절한 거시경제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선진경제 사회로 가는 데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 제도와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가 빈발하는 등 국민들의 개혁의지가 약해지고 개혁 피로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외환 유동성 위기 극복하고 팔목할 만한 경제성과 이뤄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구조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 이에 따른 대량실업, 극심한 경기침체로 1인당 국민소득이 97년 1만달러에서 98년에는 절반수준인 6,700달러로 감소하였다. 외환보유고는 39억달러 수준으로 바닥을 드러내었고, 96년 12월말 1달러당 844원이던 환율이 97년말에는 1,965원까지 치솟았다.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의 틀을 정립하고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생산적 복지 제도를 정비하고 남·북 경협을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구조개혁 통해 시장경제의 틀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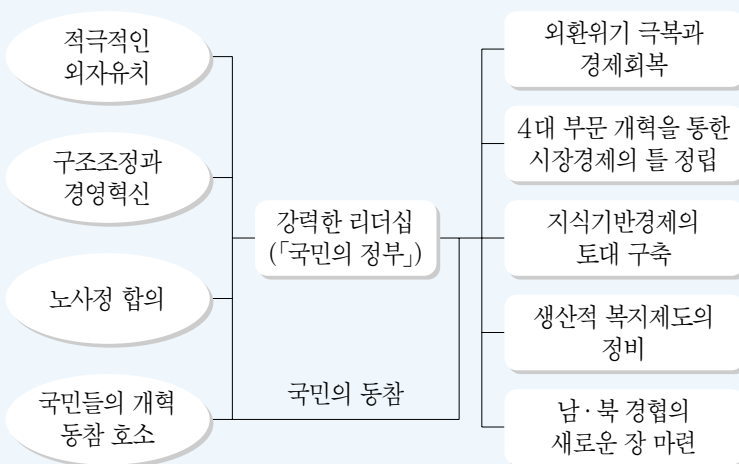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업·

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1단계 구조개혁에서는 시급한 부실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시장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1단계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2단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효율성·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 개혁을 추진하여 나가는 한편, 개혁분위기 이완과 개혁피로현상을 시정해 나가고 있다.

〈그림 1〉 위기 극복을 위한 2년 반의 노력과 성과



□ 금융부문 개혁

정부는 회생이 어렵거나 회생 비용이 과다한 부실금융기관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였다. 부실경영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을 확립하였다. 또한 금융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의 '자산건

전성 분류기준(FLC)'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일반은행의 BIS 비율이 97년말 7.04%에서 99년말 10.83%로 증가하게 되었다.

□ 기업부문 개혁

체제와 합의한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원칙'과 '3대 보완원칙' 즉, '5+3대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였다. '5대 기본원칙'이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 강화를 뜻한다. 한편 '3대 보완원칙'이란 제2금융

권 경영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 변칙상속·증여의 방지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4대그룹 평균 부채비율이 98년 352%에서 99년에는 174%로 축소되었다. 또한 외형 위주의 기업경영에서 탈피하여 수익성 중시 경영을 함에 따라 경상이익이 98년의 마이너스 5조원에서 99년에는 13조9천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다.

□ 노동·공공부문 개혁

노동부문에서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고용조정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였으며, 참여와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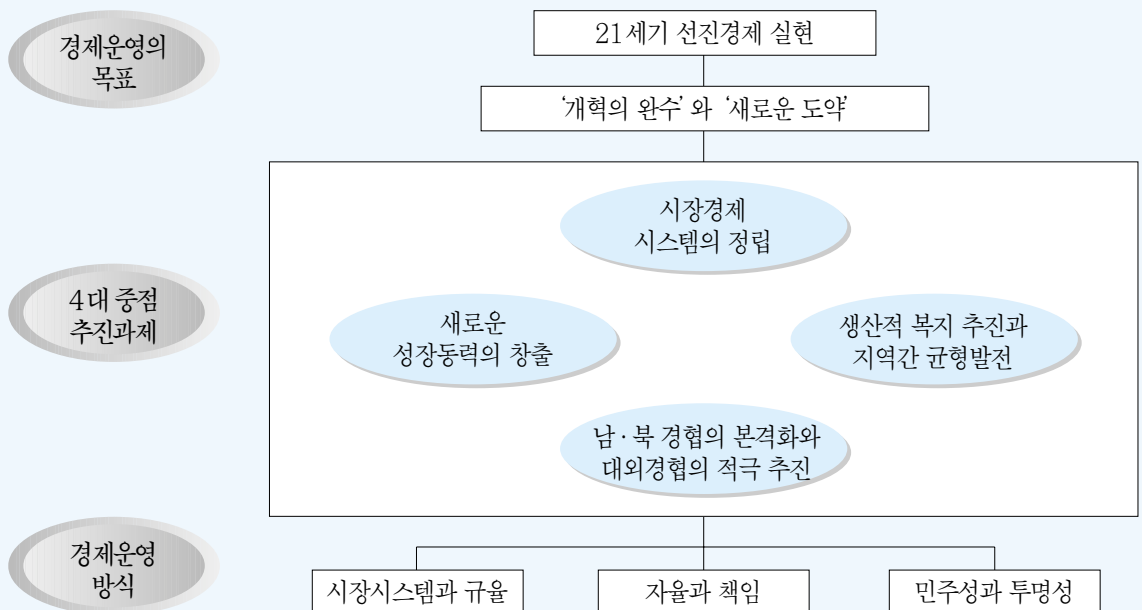
력을 중시하는 신노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은 타부문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과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였으며, 행정규제를 대폭 축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토대 마련

「국민의 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지식기반경제 발

〈그림 2〉 국정 2기 경제정책 추진방향



전전략 3개년 실천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존의 대기업과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1천만인 정보화 교육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생산적 복지제도를 정비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3대 국정운영 정책기조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가장 적극적인 복지시책이 고용증진이라는 인식 아래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경제 위기 이후에 심각해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고용·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즉, 정부는 그동안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의 틀을 정립하고,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생산적 복지제도를 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시행하고 또 고용보험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4대 보험을 내실화하였다.

남·북 경협을 새로운 장 열어

2000년 3월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남·북 경협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정부는 6월 남북정상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에 합의하였다.

남·북 경협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대외경제 협력과 개방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이제 우리 경제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경제사회로 도약하

느냐 아니면 좌절에 빠져 영원한 중진경제로 뒤처지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 세기의 낡은 경제시스템에서 탈피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선진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 집권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단없는 개혁, 지식정보강국으로의 도약,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국정 후반기의 주요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 나가야겠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국민의 정부」 2기 경제운용 방향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우선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위기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사회통합을 뒷받침해 왔다. 또한 역사적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구조개혁 완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과제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의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1년 반이라는 최단시일내에 외환위기를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sthan11@mofe.go.kr)

극복하면서 성장·고용·물가·경상수지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대외신인도가 크게 제고되고 국민들의 자신감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개혁의 初心으로 돌아가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결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 시스

템을 확고히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바이오·문화·관광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간의 성장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핵심 연구개발 투자(R&D)를 확대하고 효율화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적 안정과 국민화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저소득층의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레저 등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보장 시스템을 내실화·체계화하는 한편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상호간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한 경제협력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경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3년간 우리가 직면

하게 될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자.

먼저 세계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교역량도 신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고유가의 지속, 동남아 통화가치의 하락, 국가간 통상마찰의 확대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기회가 나타나고 있으나, 소득격차 및 정보격차의 확대 등 계층간·부문간 갈등요인이 있으며,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의약분업 실시 및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라 재정 및 사회적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대내외 여건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장경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성공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6% 내외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지만, 반대로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여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내년 이후에는 경기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6개월~1년이 경제개혁을 통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을 정립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할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국정 2기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는, 국정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는, 6% 내외의 적정성장을 지속하여 실업률을 3~4%대에서 유지하고, 3% 이내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할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초석 마련

국정 2기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는 국정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하여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개혁의 완수를 바탕으로 6% 내외의 적정성장을 지속하여 실업률을 3~4% 수준에서 유지하고, 3% 이내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과 선택'의 원칙하에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단계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정 2기를 3단계로 나누어, 내년 2월까지의 기업·금융 부문의 잠재부실처리 등 각 부문의 당면현안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내년

말까지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의식·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사회보장시스템의 효율화에 주력할 것이다. 계속하여 시장경제시스템에 의해서 지

속적인 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하면서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전략하에서, △시장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시너지가 발휘되고 원칙과 질서에 입각한 시장규율을 명확히 확립하는 '시장시스템'과 '규율'의 원칙 △각 경제주체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 △이해관계자·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민주성'과 '투명성'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다.

경제팀은 '하나의 팀'으로서 공동운명체로 운영하여 전 경제부처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

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6% 내외의 적정성장 유지하고 세계 10대 정보강국으로 부상

국정 2기에 추진할 핵심과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마무리, 경제의 지식기반화, 서민·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남·북한간 및 대외 경제협력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우선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내년 2월까지 완수하여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마련할 것이다.

10월경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하고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투입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지을 것이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 부실기업 처리를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2001년말까지는 M&A 및 기업구조조정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과제를 시민단체와 함께 개혁해 나갈 것이다. 2003년까지는 정부출자은행을 민영화하고 경영성과의 노사간 합리적 배분원칙을 정착시키며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경제의 지식기반화 적극 추진

경제의 지식기반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과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창의적인 인력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전국 144개 주요 지역에 대한 광케이블망 구축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센터화 방안을 마련하며, 전통산업의 IT화 등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효율화하고 산·학·연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원격대학제도' 도입 및 학점은행제 개선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내년말까지 민·관 합동의 B2B 시범사업을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코스닥시장의 관리운영체제를 개선하며, 농농업 직접지불

제 시행 및 농작물 재해보험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9개 주력산업별 전 자상거래 시스템을 2003년까지 구축하고, 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2년까지 정부 연구개발투자 금액을 예산의 5%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하고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

서민·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두터운 중산층 형성을 뒷받침하고,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화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우선 10월부터 실시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편입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외수가의 단계적인 현실화 등 의약분업의 원활한 정착방안을 내년말까지 마련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검점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

국정 2기를 3단계로 나누어, 내년 2월까지 기업·금융 부문의 잠재부실처리 등 각 부문의 당면현안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내년말까지는 시장경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율화에 주력할 것이다.

선하고, 물수요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물절약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2003년까지 사회보험간 상호연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염총량제 실시 등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삶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남·북 경협을 활성화

남·북한간 공동이익 증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의선 철도복원 등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자 한다.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추진하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무역흑자기조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무역인프라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일본과의 투자협정(BIT) 체결,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대외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2003년에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 중심권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시장경제시스템이 정비되고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도 선진형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도록 변화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원칙이 확립되고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하에 경쟁력이 강화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정부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변신될 것이다.

또한 경제의 지식정보화가 가속화하면서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센터로 부상하며, 기초과학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교육환경도 OECD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다. 소득분배구조 역시 OECD 국가의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되고 사회보장시스템도 보다 선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

통계로 본 「국민의 정부」 2년 반

지 난 1997년말, 우리 경제는 6·25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환율이 사상 최고수준(1,965 원/달러, 97.12.24)으로 급등하고, 외환보유고가 바닥(39억 달러, 97.12.18)을 드러냈다. 국가 신용도가 투자부적격으로 내려갔고 외국투자자도 발길을 돌렸다.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97.1 한보 ; 97.3 삼미 ; 97.4 진로 ; 97.5 대농 ; 97.7 기아)가 나고, 실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97년 56만명 → 98년 146만명 → 99년 2월 178만명). 극심한 경기침체로 1인당국민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급기야 우리는 IMF에 자금지원 요청(97.11.21)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정부」는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출범했으며, 우선 외환위기로 위축된 경제의 정상복원을 시작으로 위기의 근본원



김문수

재정경제부 국내홍보과장

인이었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정책기조로 하여 금융·기업·노동·공공분야 등 4대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통이 컸던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초기에 외환유동성위기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거시경제지표의 호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주체들의 전통적 의식과 관행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여기서는 국정2기를 맞이하여 지난 2년 반 동안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통계를 통하여 살펴본다.

1년 반 만에 외환위기 극복

경제성장은 9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지난해 10.7% 성장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11.1%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때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3%대로 하락하면서 실업자수가 8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물가는 98년 7.5%까지 상승하다가 작년에는 사상최저 수준인 0.8%까지 하락한 뒤 올 상반기에도 1.5% 내외에서 안정되는 등 우리 경제에 '고성장-저물가' 기조가 뿌리내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저물가·고용안정과 더불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생산은 98년 1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작년 3월 이후 꾸준히 두자릿수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다. 98년에 60%대까지 하락하던 제조업가동률도 IMF 이전 수준인 8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신설법인수/부도업체수도 IMF 이전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고, 어음부도율은 경기

회복, 신용경색 해소 등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98년초 일평균 160개 수준까지 상승했던 부도업체수도 일평균 20개 내외로 크게 감소하였다.

수출은 97, 98년중 급감했으나, 경기회복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 들어 큰 폭(25.5%)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및 IT산업 호조 등으로 13% 내외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연간 18% 내외 수준으로 증

6·25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던 우리 경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 외환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1달러당 1,965원으로 치솟았던 환율은 1,110원대에서 안정되고 있고, 39억달러로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고는 2000년 7월말 현재 90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가할 전망이다. 수입도 유가상승, 설비투자 증가로 상반기중 44.7%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원유가 상승분(원유도입액이 수입증가액의 25%)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다. 경상수지는 97년 큰 폭의 적자에서 98, 99년에 이어 올해에도 흑자세가 지속(2000년 경상수지 전망 : 100억~120억달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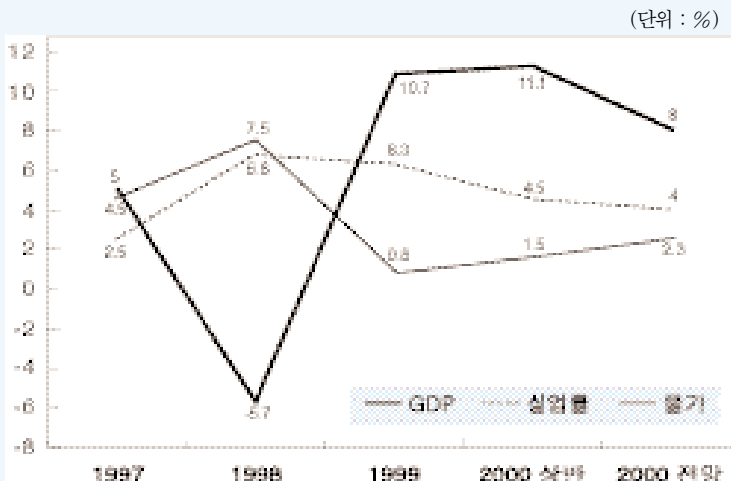
IMF 이후 30%대로 치솟던

시장금리는 98년 10월 이후 한자릿수로 안정(2000년 7월 3년만기 회사채 9.1%, 콜금리 5.1%)되고, 99년 7월 이후 대우사태 등으로 회사채금리가 일시적으로 두자릿수대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00

년 5월부터 한자릿수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연중 평균 은행대출금리가 8%대로 하락하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99년 3월 이후 한자릿수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1,965원까지 상승했던 원화 환율은 1,110원대에서 안정되고, 39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2000년 7월말 현재 90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도 지난해 높은 증가율로 인해 상반기 증가율은 다소 낮으나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 이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순유입을 시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중 100억1천만달러가 순유입되어 99년중 순유입규모(55.0억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대외지불 부담면에서도 99년 3/4분기 이후 우리나라는 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단기외채규모는 2000년 6월 현재 475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93억9천만달러 증가하였

〈그림 1〉 성장·물가·실업률 변화 추이



으나, 대외지급능력을 감안한 외환보유액 대비 비율(단기외채/외환보유액)은 안정수준(52.7%)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1년 반 만에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회복한 것이다. IMF 등 국제사회도 우리의 외환위기극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투자부적격(B+)이었던 국가신인도도 투자적격(BBB+)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시장경제의 기본 틀 마련

「국민의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하여 시급한 부실을 제거하고, 시장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주력하였다. 회생이 어렵거나 회생비용이 과도한 부실 금융기관은 합병·자산부채이전·청산 등을 통하여 정리(2000년 6월말 현재 472개)

하였다.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는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부실경영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인원 및 점포감축을 실시하여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 확립을 통해 시장규율을 정립하였다.

금융건전성 감독기능도 크게 강화되었다. 금융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불건전 금융기관에 대하여 단계별로 조치하는 적기시정조치제도(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와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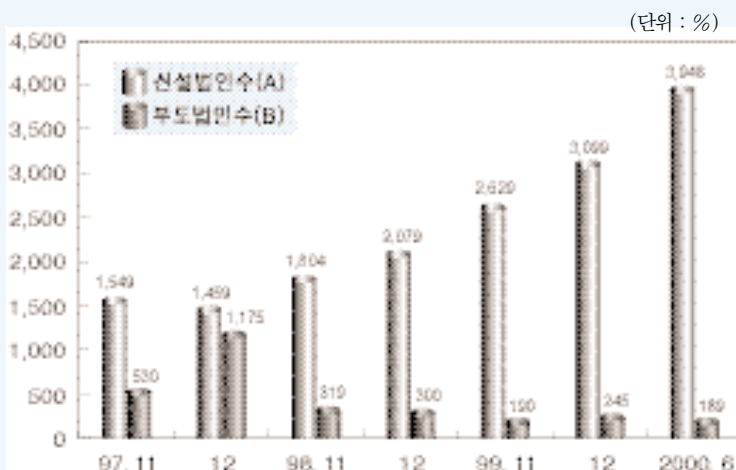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간 합병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간 합병시 특별부가세를 대폭 감면(80%)하였다. 그 결과 금융권 부실채권이 대폭 감소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우선 99년말 66조7천억원으로 98년 5월 공적자금 64조원 조성시 근거로 삼았던 국제기준에 의한 부실채권규모(98.3말) 112조원 보다 45조원이 감소되었다. 97년말 7.04%에 불과하던 일반은행 기준 BIS비율이 99년말에는 10.83%로 크게 향상되었다. ‘대기업-직접금융, 중소기업-간접금융’ 중심의 선진국형 자금흐름구조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관행도 담보대출에서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에 따른 신용대출로 되는 등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다.

한편, 재계와 합의한 ‘5+3대원칙’을 바탕으로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수익성 위주의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대폭 축소되고, 경상이익이 98년 -5조원에서 99년 13조9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30대 대기업집단의 계열수도 대폭 감소(98.4, 804개(4대그룹 220개)→2000.4, 544개(4대그룹 162개))하여 핵심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업이 개편되고 있다.

〈그림 2〉 부도업체수 대비 신설법인수 추이



한편, 노사정합의를 통한 고용조정제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파견업체 수 : 2000.7. 현재 1,333개소, 파견근로자:99년말 5만2,218명).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참

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종래의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의 관념이 중시되고 공무원·교원·장애인 등의 노동기본권이 강화되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총 1만 1,125건의 행정규제 중 70.5%인 7,841건이 폐지 또는 완화되었다. 정부조직과 기능이 핵심역

경제성장은 9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지난해 10.7% 성장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1.1%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한때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도 3%대로 하락하였고 98년 7.5%까지 올랐던 물가도 작년에 사상 최저수준인 0.8%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5%에서 안정되고 있다.

량 위주로 개편되고 공기업 민영화 등 강도높은 경영혁신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토대 구축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기틀 마련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여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인프라가 구축되

고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9년에 3만개의 벤처기업이 신설되고 2000년에 4만개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신산업분야(50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고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을 전개하여 전국민의 신지식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주부·군인·학생·농어민 등 1천만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주로 기업도산 및 퇴출 등에 따른 실업증가와 벤처기업 및 코스닥호황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이며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정책기조로 설정하여 대규모 실업대책(98년 10조원, 99년 9조2천억원), 일자리 창출(2003년까지 200만개)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였다. 즉, 4대개혁을 통하여 경쟁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짜 나가되 시장실패자

〈표 1〉 기업부채 비율

	(단위 : %)	
	1998	1999
4대기업	352.0	173.9
30대기업	380	219
상장제조업체 평균	271.8	148.5

〈표 2〉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2000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1997말 기관수(A)	인가취소	합병소멸	해산 등	계(B)	비중(B/A)
은 행	33	5	5	-	10	30.3
비은행*	2,069	82	126	254	462	22.3
계	2,102	87	131	254	472	22.4

주 : 증금, 증권, 보험, 투신(투신운용사 포함),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등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쟁과 효율만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2000년 10월 시행)하고, 4대 사회보험제도가 내실화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99년 4월)되었다.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부분통합(98년 10월) 및 직장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관리조직이 완전 통합(2000년 7월)되는 등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추진되었다.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실시되고 고액재산가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반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하였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평균 30% 경감(연간 1조4천억원)되고 중산·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연간 1조원)되었다.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단축(1년)되는 등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경기회복과 그동안의 시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99년 2/4분기부터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하위 20%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배율도 99년 1/4분기에는 5.85까지 상승하였으나, 2/4분기부터는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 열려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다. 농업구조개선 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력을 통한 경제회복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북한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나아가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시 남북정상 공동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 등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회복과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와 더불어 우리 경제주체의 전통적 의식과 관행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구조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경쟁과 효율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암적인 존재였던 부동산 신화·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어지고 외환위주의 기업문화가 수익성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직이 민간에게 개방되고 있다. 신용거래가 일반화되고 금융기관 대출도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이 점차 선진형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도록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될 경우 머지않아 우리 경제는 선진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

〈표 3〉 정보인프라 변화

	1997년	2000년 7월
인터넷이용자	163만명	1,603만명
이동전화가입자	682만명	2,609만명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5만가구	148만가구
PC 보급대수	693만대	1,035만대(99년)
Kr 도메인수	8,045개	494,074개
IT 산업의 GDP 비중	9.5%	21%

조정국면으로서 정상적 흐름이다



이희수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HLee@mofe.go.kr)

우리 경제는 98년 -6.7%의 성장감소에서 벗어나 99년에는 10.7%, 2000년 1/4분기에는 12.8%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업생산 등 일부 경제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전월차)도 올 2월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 여건 호조 등으로 경기는 하반기 이후 재상승할 것

그러나 이와 같이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경제가 점차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경기동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기순환과정의 小頂點으로 판단되며 한국경제는 올 하반기중 안정적 조정국면을 거친 후 재상승하여 내년 3/4분기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국면이, 정점을 지나 하강하는 것이 아닌 조정국면으로 하반기 이후 경기가 재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경제 여건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독일·프랑스 등 EU국가와 일본의 경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연착륙이 전망되는 등 세계경제의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경기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OPEC 회원국들의 감산정책으로 배럴당 3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올 상반기를 고비로 하반기 이후에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상승에 따른 경장수지 악화, 물가상승 등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도 점차 해소될 것이다.

둘째, 건설한 내수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설비투자가 작년 38%의 성장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63.6% 증가하는 등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99년 말을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의 80%대에 불과하

며, IT산업(99년 성장기여율 38%)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계속되어 올해에는 30%대, 내년에는 10%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가동률도 아직 80% 이하에 머물고 있어 94~96년 경기호황기의 81%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 없이 생산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라 건축허가면적(99년 42.3%→2000년 1/4분기 90.6%→2/4분기 35.8%)이 작년 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국내건설수주(99년 0.8%→2000년 1/4분기 75.9%→2/4분기 20.4%)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지난 2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인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99년 3만701개→2000년 1/4분기 1만1,710개→2/4분기 1만1,542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설/부도법인의 배율(99년 12.4배→2000년 1/4분기 17.5배→4,5월 17.9배)도 18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외여건의 호전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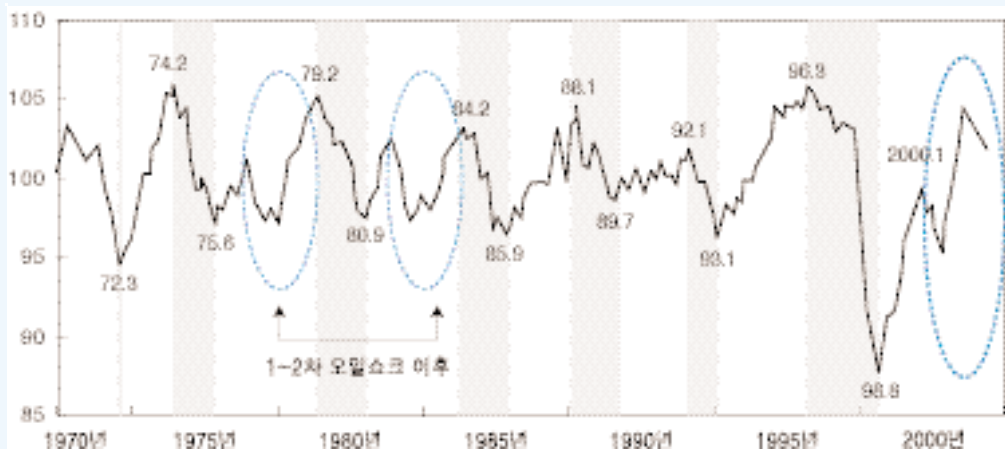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과거의 상승주기, 디지털경제의 효과, 설비투자 호조, 기업의 활발한 창업활동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경기가 지난 1/4분기 소정점을 통과한 후 안정적인 조정국면을 거쳐 재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IT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뿐만 아니라 온라인(on-line) 산업과 오프라인(off-line)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상승시켜 경기상승국면을 연장시키고 인플레이 없는 경제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재고순환 측면에서 볼 때 출하증가율이 재고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재고순환 측면에서 살펴보면, 출하증가율과 재고증가율간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으나, 출하증가율이 아직 재고증가율보다 높아 현재까지 경기정

〈그림〉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과정



점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넷째, 과거 경기순환과정과 비교할 때 아직 경기 정점에 도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과거 경기순환과정과 비교해 보면 1~6순환기(72~96년) 동안 경기상승 지속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으나 올해 1/4분기중 정점에 이르렀다면 경기상승기간이 과거의 절반 수준인 19개월에 불과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며, 5월부터는 경기동행지수 및 산업생산 전월비가 이미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또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0년 이후 대체로 경기정점기에 104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현 경기상승기중 최고기록은 올 1월 99.2로서 추세점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제2순환기에 오일쇼크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연속 7개월(76년 9월~77년 3월) 동안 하락한 후 다시 상승추세로 반전된 경험이 있고, 제3순환기인 2차 오일쇼크(82~83년) 기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과거 평균 호황기간인 34개월을 적용할 경우 내년 6월에 정점에 도달하고, 지난 6순환기 호황기간인 38개월을 적용할 경우 내년 10월에 경

기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구조조정의 성과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4대부문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국정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신축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자금시장의 안정,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내년부터 다시 상승국면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긴축, 통화신축’의 정책기조 유지

우리 경제의 정점이 어느 시점에 도달할지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나 세계경제의 회복세, 과거의 상승주기, 디지털경제의 효과, 설비투자 호조, 기업의 활발한 창업활동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경기가 지난 1/4분기 소정점을 통과한 후 안정적인 조정국면을 거쳐 재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향후 2~3개월의 경기지표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7~8월중 경기동행지수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여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지난 1/4분기가 경기정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대응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향후

〈표 1〉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추이

(단위 : %)

	1999년	2000년	2001년
세계경제 성장률	2.9	3.9	3.7
교역증가율	4.5	8.4	6.6

〈표 2〉 출하 및 재고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비, %)

	1999년 12월	200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출하(A)	26.4	30.0	28.2	18.0	14.0	21.0	18.6
재고(B)	2.1	6.1	8.1	11.3	12.3	12.5	11.8
차이(A-B)	24.3	23.9	20.1	6.7	1.7	8.5	6.8

의 경기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재정긴축, 통화신축'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유가·임금 등 코스트 푸시(cost push) 요인,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해, 금융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경색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재정은 보다 더 긴축운용하되, 금융은 탄력성을 제고함으로써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견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과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물경제의 일시적 조정국면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금융시장불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장차 우리 경제를 견인해

현 단계에서는 유가·임금 등 코스트 푸시 요인,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해, 금융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경색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재정은 보다 더 긴축운용하되, 금융은 탄력성을 제고함으로써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견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나갈 '지식기반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산적 복지시책'과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수립·추진하여 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화합이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업을 육성하는 길은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국산품애용 운동' 등 캠페인을 벌여 가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외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였으며, 국민들도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애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이와 같이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는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품질이 좋지 않은 것도 국산품이라고 해서 구매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나 품질개선 노력을 저해하여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결국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일본의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일본 소비자의 까다로움이 일본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오늘날의 '경제대국 일본'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산품과 외제품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다.

◆ 출처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재정경제부·KDI 경제정보센터편

경기가 하강국면이다



정한영

한국금융연구원 경제동향팀장
(hyjung@sun.kif.re.kr)

외 환위기 이후 고금리정책에 따른 신용경색과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1998년 급격한 침체를 보였던 우리경제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힘입어 저금리 정책으로 선화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GDP성장률이 1999년 4/4분기에 13.0%, 2000년 1/4분기에는 12.8%를 기록함에 따라 한때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 동월비의 M자형 형성 가능성 희박

그러나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10개월째 둔화되고, 동행 경기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도 급년 들어 계속 둔화기미를 보임에 따라 이미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생산·소비·투자 등 개별지표들의 증가세가 예전의 경기상승기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기가 아직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1998년 8월에 경기저점을 통과하였고, 평균 확장기가 약 34개월

임을 감안하면, 경기정점은 내년 중순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의 정점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개별지표의 움직임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변화를 평균한 선행·동행·후행 경기종합지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99년 8월에 선행 경기

종합지수 전년동월비가 높은 정점을 이루고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는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 동월비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이는 국지적인(local) 정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99년 8월의 정점에 버금가는 또다른 봉우리(M자형)를 이루기 힘들다. 특히 98년 침체에 대한 반등으로 경기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정점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두번째 봉우리가 첫번째 봉우리를 상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 동월비가 M자형의 정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개월 이상 반등하여야 하고, 이후 다시 8~13개월 뒤에 경기가 정점을 이룬다면 경기정점은 2002년에나 나타날 것이다. 이럴 경우 경기 확장기는 평균 3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야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 동월비가 90년대 초·중반처럼 엠(M)자형의 패턴을 보이기 어려운 경제적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호보증 해소 및 내부자 거래 차단 등을 통한 거대 재벌의 분리작업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융 및 실물거래, 세원 그리고 인사제도 등이 투명하지 못하고, 업종별·규모별로 산업경기가 양극화되었으며,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이 축소되지 못했다.

둘째,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저금리 기조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금융산업구조조정 자금지원,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으로 인해 실물부문 대비 통화량은 확대되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하여 벤처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축소되면서 기업이익이 대폭 증가하였고, 금융기관들은 장단기금리 차익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확대된 시장유동성과 더불어, 빠른 성장세에 따른 총수요압력 증가, 임금인상 및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통화가 확대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원화의 절상효과가 이를 상쇄할 정도로 컸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99년 17.8% 절상하였으나, 2000년 1~7월 평균 6.1% 절상됨으로써 절상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01년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어 원화의 절상압력이 계속 유지되었지만,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계속 상회함에 따라 흑자폭이 점점 둔화되어 절상압력은 계속 약

경기의 정점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경제지표의 변화를 평균한 선행·동행·
후행 경기종합지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99년 8월에 선행 경기종합지수
전년동월비가 높은 정점을 이루고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는 이미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절상을 통한 물가안정효과가 점점 미약해진다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상향조정하는 이외에 총수요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이 없다.

셋째,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new economy)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벤처기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닷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산과 성장세는 적은 인원과 작은 자본금으로 고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 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코스닥지수의 급등세로 이어졌고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증대에 이바지한 면이 크다. 그러나 최근 벤처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의구심이 불거지면서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되고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문인력이 재이동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로자의 창의성 및 근로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노동 및 자본 생산성 향상에 負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경제여건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일본의 제로금리 포기에 따른 엔화강세와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우리 수출을 진작시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작년 중반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국제금리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교역조건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직접차입 및 보증채무 등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동시에 외채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0년 6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997년말 대비 172억달러 줄어든 1,42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9년 GDP 대비 34.9%로 97년 33.4%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또한 98년 10월말 19.4%까지 떨어진 단기외채 비중이 2000년 6월말 현재 33.5%까지 상승하였다. 물론 경상수지 흑자기조하에서 총외채가 감소하면서 단기외채 비중이 30~40%대에서 머무는 것은 외화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니나, 2001년말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외화자금의 유입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착륙을 위해서는 긴축적인 거시경제여건이 필요

실사 경기가 정점을 보았다 하더라도 경제가 급격히 침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는 금년 GDP성장률이 9%에 근접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원화의 절상세 및 신경제의 영향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2.5% 이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하반기 GDP성장률이 6~7%대로 둔화되어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다.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최근의 경제성장세가 과열되거나 또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급격히 소멸되지 않도록 앞을 내다보는 정책노력과 함께 미조정된(fine tuning)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채무의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내에서만 단기부동화하는 과다한 시장유동성을 단기금리의 탄력적 운용에 기초한 장단기금리차 해소를 통해 조절하는 등 긴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량적 거시정책과 함께 벤처기업의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유망 업종 발굴 등 미시적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실물부문의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보통신 및 재무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각종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셋째, 중앙은행의 단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기금리 인상은 경제의 성장속도를 둔화시킴으로써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은 실업을 줄일 수 있으나, 결국 물가 상승,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 외채 증가로 이어져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려하여 계속해서 저금리기조를 추구하는 것은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낮은 금리가 계속 될 것이라는 우호적인 경제 여건하에서 조직의 축소(downsizing)가 요구되고 소외계층의 반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이 적극 추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제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면 단기금리를 상향조정하면서 동시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강도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채권가치가 하락하여 이들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이들 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V자형의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정점이 빨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착륙 여부에 따라 국지적인 경기상승세가 짧게 나타날 수 있고 경기 하강기도 단축될 수 있다. 특기할 사항은 10개의 구성지표로 작성되는 선행종합지수는 선행성이 떨어지는 M3를 포함하고, 재고순환지표가 최근 경기회복으로 인해 재고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선행종합지수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정점 도래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다. ■

경기, 하반기 이후 하강국면 진입



이승명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reeon@hri.co.kr)

최 근 각종 경기 및 실물지표의 움직임과 소비자 및 기업의 체감경기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 경제의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조기에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기 저점으로 추정되는 98년 8월부터 시작된 현 경기상승기가 예상보다 조기에 마무리되어 곧 정점을 찍고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과거 경기순환의 경우 경기확장국면이 평균 34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순환의 정점은 내년 4~5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던 각종 실물지표의 증가세가 최근 들어 현저히 둔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일찍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하반기말에 정점 도달 후 곧이어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듯

국내 경기는 하반기말에 가서 정점에 도달한 후 곧이어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해외 수출시장 환경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

고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의 가시화 및 금융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기급랭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실물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실물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 99년중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 3.1%, 2/4분기 4.1%, 3/4분기 3.3%로 높은 수준을 보여 오다가 이후 급속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12.8%로 나타났다지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살펴보면 1.8%에 불과하다. 이는 99년말의 2.8%에 비해 급속히 하락한 것으로 성장속도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들어 산업생산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 및 투자 등 실물지표들도 급속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4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던 산업생산, 도소매판매, 국내기계수주 등 소비와 설비투자 관련 지표들이 2/4분기 들

국내 경기는 하반기말에 가서 정점에 도달한 후 곧이어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해외 수출시장 환경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의 가시화 및 금융불안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경기급랭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중 2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산업생산은 2/4분기 들어 18.3%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었으며 도소매판매 증가율도 1/4분기 14.4%에서 2/4분기에는 12.4%로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 경기는 최근 수주 증가세를 감안할 경우에도 올 하반기 내에 호황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경기 평가 및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지수들의 추이가 하반기 이후 경기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 1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어 경기가 정점에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향후 경기를 가늠하게 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작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 정점에서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선행 시차가 경험적으로 평균 12~13개월임을 고려할 때 올 연말 이후 경기 하강국면 진입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위

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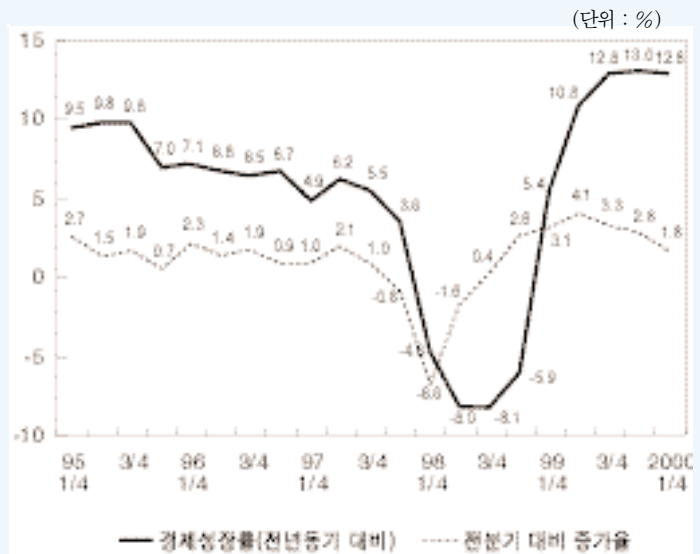
향후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및 기업의 투자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경기 선행지표의 역할을 가진 각종 소비자전망조사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최근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소비자전망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가계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가 전월에 이어 6월에도 100 이하를 기록하여 최근의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하고 있으며 6개월 후의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도 올 들어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전경련의 기업경기실사지수의 경우 7월의 91.4에 이어 8월에도 91.1을 기록, 두달 연속 기업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금융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자금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 자금난 악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이 보인다. 현재의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

〈그림〉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이 지속되는 경우 일부 기업에 국한된 신용차별화 현상이 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확산되고 한계 기업 외에도 수익성이 양호한 건전기업들마저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최근의 신용경색 현상은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 억제라는 측면 외에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 및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저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종 금융 시장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증시 및 채권시장의 침체와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경우 생산활동의 위축과 함께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는 하강국면에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미국의 경기 둔화 및 연착륙 가능성, 국제 원유가 및 원자재가의 상승세 지속, 세계 도처에서 점증하고 있는 수입규제, 통상마찰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 가능성이 향후 국내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특히 원유가 상승 및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의 36% 수준인 44억달러에 불과하고 특히 4월중에는 9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3억3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어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에는 다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도 6~7월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최우선 명제로 삼고, 거시경제 관리지표상의 우선 순위를 현재의 저금리 기조 유지 → 경상수지 확대 → 안정적 성장 지속 → 저물가 유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의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들어 유류가 및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큰 폭의 상승세로 반전되어 향후 임금인상 가능성과 함께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정적 거시정책 운영을 최우선 명제로 삼아야

이상에서 볼 때, 국내 경기는 완만한 상승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둔화되고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경기국면이 향후 재상승을 위한 조정국면이라고 보는 시각은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에 불과할 수 있어 지금은 하반기 후에 다가올 수 있는 경기하락에 대비한 시의적절한 정책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특히 내년 이후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의 둔화, 건설투자의 회복 부진, 대외경제여

〈표〉 월별 산업활동 추이(2000년)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생산	28.1	25.4	17.6	16.9	20.1	17.9
도소매판매	16.6	13.9	12.8	11.4	14.7	11.1
국내기계수주	17.8	19.8	17.5	25.1	10.2	-5.8
국내건설수주	105.3	74.5	55.7	-4.4	18.8	44.3

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부문의 성장탄력성 상실 등으로 인해 향후 뚜렷한 성장 견인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기가 급랭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지표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하면 현재의 실물지표 상황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고 장기적 금융불안이 초래할 수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긴축기조로의 전환은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물이다. 향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상승은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이므로 금리인상 등에 의한 총수요관리로 대응하는 경우 과도한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최우선 명제로 삼

고 거시경제 관리지표상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격한 물가상승의 우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리지표상의 우선순위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 유지 → 경상수지의 확대 → 안정적 성장 지속 → 저물가 유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불안 심리를 제거하기 위한 강도 높은 금융시장의 안정책과 함께 향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상의 경중·완급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통해 시장에서의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현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강조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지나치게 역점을 둘 경우 과도한 긴축 재정을 유발하게 되고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국제수지통계의 ‘오차 및 누락’ 증가는 자본의 불법 해외도피가 늘어났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통계는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통계 외 한국은행 외환수급통계 그리고 정부·기업체·협회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다수의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는데, ‘오차 및 누락’은 이와 같은 다양한 기초통계들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오차 및 누락’의 발생원인은 기초통계들간의 작성 기준 차이, 기초통계 자체의 오류 내지 누락, 수출입 거래와 대금결제간의 시차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수지 편제의 국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IMF에서도 통계편제상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항목이며 국제수지를 편제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오차 및 누락’은 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차 및 누락’은 방향(+ 또는 -)이 반대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서로 상쇄될 수도 있으므로 그 규모 자체가 국제수지통계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절

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다만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일정방향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국제수지통계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상의 ‘오차 및 누락’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부 계층의 불법적인 자본의 해외유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크게 대두된 적이 있는데, ‘오차 및 누락’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초자료의 불일치 등 통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자본도피와 연결시켜 생각하기는 어렵다.

◆ 출처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재정경제부 · KDI 경제정보센터

국채 축소 의지 반영된 추경안

외 환위기 이후 세입증가율은 감소하고 금융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출증가율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GDP 대비 통합재정 세입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20% 수준에서 22%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세출 및 순융자 규모는 20%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1980년대초 이래 평균적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하던 재정수지는 경제위기 직후 큰 폭의 적자로 반전하였다(〈그림 2〉 참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997년 1.5%, 1998년 4.2%로 급격히 증가한 후 1999년 2.7%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당분간 적자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 증가

재정적자의 확대와 함께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90조 1천억원이며, 지방채무를 합할 경우 108조 1천억원, 보증채무를 합할 경우 189조 9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의 GDP 비율은 1999년말 현재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8.4%로서 역사상 최고수준인 1975년(22.9%)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보증채무를 합할 경우에는 35.1%로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그림 3〉 참조)(필자 주 : 보증채무의 급증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정부보증채권(64조원) 발행에 기인한다).

국가부채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국채의 증가인데, 1999년말의 차입금 잔고가 1996년말에 비해 13조 3천억원 증가한 반면 국채는 40조 2천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차입금 증가가 경제위기 발발 직후인 1997년말에 집중되었던 반면(필자 주 : 경제위기 발발 직후의 차입금 증가는 주로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차입금 증가에 기인한다), 국채는 순발행액이 1998년 18조원, 1999년 19조 3천억원으로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6년말부터 1999년말까지의 국채 증가분 40조 2천억원 가운데 국고채권의 증가분은 29조 1천억원, 국민주택채권 등 기타 채권의 증가분은 11조 2천억원이다(〈그림 4〉 참조). 국고채권 증가(29조 1천억원)의 대부분(20조 1천억원)은 일반회계 국고채권의 증가에 기인하며, 기타 국채의 증가(11조 2천억원)는 외평채권 증가(6조 8

최근의 국가부채 급증은 경제위기 이후
성장을 하락에 따른 세입의 감소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국채 이자부담 증가,
실업대책 등에 따른 세출증가로 인한
재정적자가 그 원인이다. 이 중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금융부실을 치유하고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룩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억원) 및 국민주택채권(1·2종) 증가(4조4천
억원)에 기인한다.

일반회계 국채 증가(20조1천억원)는 성장을
하락에 따른 세입의 감소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국채 이자부담 증가, 실업대책 등에 따른 세출증
가에 기인한다.

1997~1999년간의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3.3%로서 1992~1996년간 연평균 증가율
16.5%를 크게 하회하여 국채증가의 결정적 요인
을 제공하였다. 또 금융구조조정 및 국채이자부담
은 1998년 3조8천억원, 1999년 6조7천억원 등

총 10조5천억원에 달했다(필자 주 : 이를 세분하여
보면, 금융구조조정 이자부담은 1998년 3조6천억원,
1999년 5조3천억원이었으며, 국채이자부담은 1998
년 2천억원, 1999년 1조3천억원이었다). 그리고 실
업 및 빈곤대책에 따른 지출증가는 1996년 대비로
1997년 6천억원, 1998년 1조원, 1999년 2조원
등 총 3조6천억원에 달했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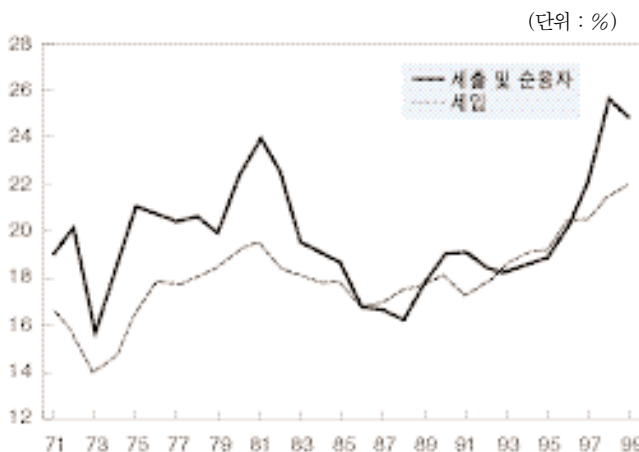
국채 증가로 재정 악화되면 대외적 취약성 높아져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운영의 측면
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먼저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여타 투자사업에 투입될 자금이 고갈된
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례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64조원의 정부보증채권에 대한 이자부담
은 작년에 5조3천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SOC
투자예산 13조4천억원의 40%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금융비용이 없었다면 SOC 투자예산을
40% 가량 증액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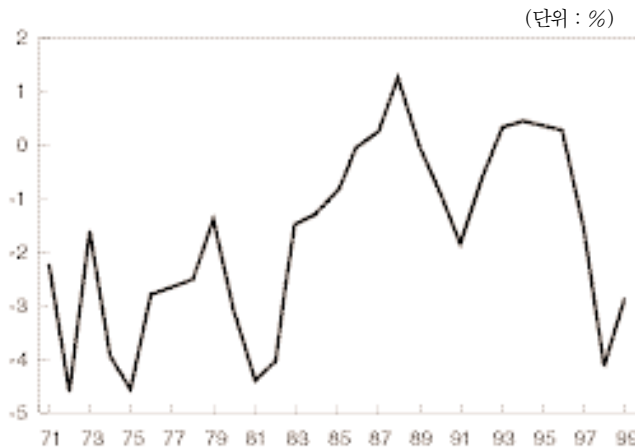
이처럼 국채 이자부담이 증가하면 '이자부담 증
가 → 재정적자 증가 → 국채잔고 상승 → 이자부
담 증가'의 악순환이 형성되어 재정적자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실제로 선진
국들이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최
근까지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
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림 5〉는 G7 국가의 재정수지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기초 재정수지는
이자부담을 제외하였을 때의 재정수
지이다. 기초 재정수지는 1975년에
큰 폭의 적자를 보인 후 1980년대말
에서 1990년대초에 흑자를 보이다
가 다시 적자로 반전하였고, 1990년
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다시 흑자를 보
였다. 그러나 이자부담을 포함한 실
제의 재정수지는 1990년대말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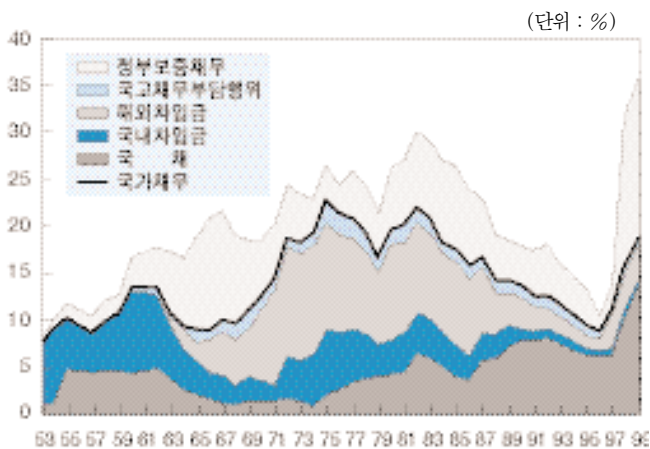
〈그림 1〉 GDP 대비 통합재정규모



〈그림 2〉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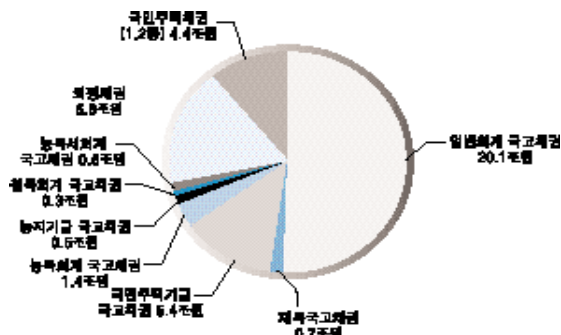


〈그림 3〉 국가부채/GDP 비율



주 : 지방정부 제외

〈그림 4〉 주요 국채의 증감 내역(96~99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일 현재와 같이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수십년 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여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한편 국채증가는 이러한 재정운영의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먼저 국채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국가경제내에 자금수요가 누적되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채증가의 보다 직접적인 위험성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대외적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데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던 마지막 보루인 재정마저 악화되어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은 브라질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후세대에게 전가되어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SOC 투자 등 투자지출은 후세대에도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급속한 노령화 추세 및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이미 우리는 후세대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대외적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이런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 물론 일본보다도 빠른 실정이다(〈표 2〉 참조). 이로 인해 현세대가 은퇴한 후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후세대의 기여율이 20%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해야 할 전망이다.

연금부담과 더불어 재정적자 부담까지 후세대에게 지우는 일은 세대간의 도적행위(inter-generational theft)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순 국가채무가 양(+)이 아닌 음(-)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국가부채 급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의 감소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국채 이자부담 증가, 실업대책 등에 따른 세출증가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국가부채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었던 금융부실을 치유하고 조속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1〉 사회복지 예산

(단위 : 억원, %)

	1996	1997	1998	1999
생활보호	7,524	9,624 (27.9)	11,188 (16.3)	17,801 (59.1)
취약계층지원	4,032	5,290 (31.2)	5,763 (8.9)	6,310 (9.5)
의료보험	9,500	10,704 (12.7)	11,116 (3.8)	12,526 (12.7)
국민연금	839	857 (2.1)	1,152 (34.4)	1,307 (13.5)
보건의료	4,074	4,298 (5.5)	3,021(-29.7)	2,912 (-3.6)
국가유공자 지원	8,595	9,612 (11.8)	10,047 (4.5)	10,336 (2.9)
직업훈련 등	2,192	2,384 (8.8)	4,638 (94.5)	5,111 (10.2)
계	36,756	42,769 (16.4)	46,925 (9.7)	56,303 (20.0)

자료 : 기획예산처

〈표 2〉 인구고령화의 속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프랑스	스웨덴	미 국	영 국	서 독	일 본	한 국
7%	1865	1890	1945	1930	1930	1970	2000
14%	1980	1975	2020	1975	1975	1996	2022
소요기간(年)	115	85	75	45	45	26	22

자료 : 통계청, 「1970~2020 시도별 추계인구」, 1998. 9

그러나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는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또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전망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채 축소외지 반영된 2000 추경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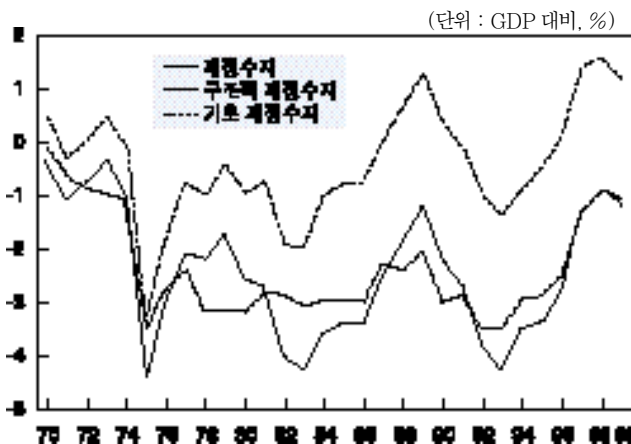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이러한 노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세수초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유재원은 총 6조4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조5천억원은 작년에 이미 국채축소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조9천억원 가운데 1조5천억원은 금년에 추가로 국채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2조4천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또 2조4천억원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 5,899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5,246억원은 법률에 따라 정산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세출소요이다. 이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추경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가급적 국채축소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면서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재정운영에 규율(discipline)을 도입함으로써 국채축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에도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작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제도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올해는 일선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대대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재정융자제도의 개선을 통해 융자사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그림 5〉 G7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주 : 구조적 재정수지 (structural balance) = 자동안정화 (automatic stabilizer) 요인을 제거하고 계산한 재정수지, 기초 재정수지 (primary balance) = 이자지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재정수지

자료: 1970~1981년은 Vito Tanzi and Domenico Fanizza, "Fiscal Deficit and Public Debt in Industrial Countries, 1970-1994," *IMF Working Paper*, WP/95/49, December 1995, 1982~1999년은 *OECD Economic Outlook*, 각호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

20 0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의약 분업의 시행에 따른 지역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난해 8·15경축사를 통해 국정이념으로 발표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99년 12월 「새 천년 복지비전 2010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 올해를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아 빈곤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합심 노력한 결과 우리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고루 주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제위기 극복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의약 분업 실시에 따른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부담 경감 및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총 8,18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계용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3,528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52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확대에 2,849억원, 생활보호자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에 71억원, 기초생활보장기

금 조성 지원에 500억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 재가노인 급식 지원에 71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는 37억원을 반영하였다.

생활보호자 생계비를 9월까지 계속 지급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급 사업은 생활보호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8년부터 동절기(1~3월, 10~12월)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9월까지 계속해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10월 실시예정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 조기시행을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 내역은 자활보호가구 44만8천가구 중 장기 실업으로 사실상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80%에 대하여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시의 수급권자 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5~7월) 결과 증가가 예상되는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예비비적 성격의 5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생활보호자 자녀 18만7천명에게 교과서대 지원

그간 정부에서는 생활보호자의 의식주 및 의료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의 세습을 막고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생활보호자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1979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여 왔다.

한편, 중고생을 둔 가구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육성회비, 교재비 및 부교재비·교복비·학용품비 등 부대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학업 부대경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보다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학업수행에 필요한 교과서대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중학생 6만3천명과 고등학생 12만4천명 총 18만7천명에 대하여 교과서 구입비로 1인당 연간 5만원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활보호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한 수급자의 빈곤탈피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자활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며 지역별 편차도 커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생업자금융자·자활공동체사업 등 이미 시행중인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기금은 「기초생활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제위기 극복결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 경감 및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총 8,184억원의 보건복지 분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예산은 지자체별 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기타 자활여건 조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배분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방비와 함께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실시, 생업자금 융자자에 대한 신용보증,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이차보전 등 자활보호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 1만7천명을 위한 식사배달사업 실시

최근 경제난과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99년 하반기부터 673개소의 전국 경로식당을 통해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은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 재가노인이 1만7천명으로 파악되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식사배달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올 4월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3,52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2,849억원, 생활보호자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에 7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500억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결식 재가노인 급식 지원에 71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7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를 위한 소요비용을 충당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식사배달사업은 이들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부 확인, 말벗 되어 주기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증노인이 있는 가족에게는 간병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결식아동 2만2,500여명에게 급식 지원

그동안 학기중에는 교육부에서 중식을 지원하고 방학중에는 민간 및 종교단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IMF 경제난으로 가족기능의 해체 정도가 심화되어 끼니를 거르는 아동의 수가 증가되었으며 올초에는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약 2만 2,500명으로 파악되어 올해 4월부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급식대상 아동 중 취학아동에게는 석식을, 미취학 아동에게는 중식과 석식을 지원하되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의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단체급식

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도시락 배달과 생활보호자 채정 및 보육시설 입소 등을 통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의약분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처방료와 조제료의 인상에 따라 연간 추가 소요되는 의료보험재정 1조5,347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9,262억원은 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0%인 6,175억원은 환자본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의료보험재정 부담분인 9,262억원의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재정의 적립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해 6개월간 소요되는 4,631억원 중 2,302억원을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지원예산을 연평균 33.1%씩 증액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만성질환자 증가, 급여범위 확대 등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급증으로 매년 의료보호비가 부족하여 99년말 현재 체불진료비가 총 2,354억원(국고기준)에 이르고 있다.

의료보호 체불진료비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95년 868억원)하고 있고 체불현상이 장기화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등 차별진료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의약분업 실시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9년말 현재 확정된 체불진료비 전액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편성하였다. ■

‘창조적 파괴’ - 개혁



정학수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지금 우리 사회는 현 천년의 목은 때를 벗고 개방과 경쟁, 화해와 협력의 새 천년을 맞기 위해 분주하다. 그것은 자의든 타의든 개의치 않는다.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세기에는 우리가 한발 먼저 변해야 하고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관행과 인습 그리고 소아적 이기주의에 얽매어 우물쭈물 하다가는 경쟁의 대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는 舊穀을 깨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나 자신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자아로 거듭나야 하며, 사회가 그리고 국가 전체가 또한 그래야 한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 요즘 어느

CF 광고에서 “세상에 공짜가 어딴”란 멘트가 있어 화제다. 그렇다. 세상에는 어쩌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지 모른다. 특히 지배와 복종,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이 같은 제로-섬(Zero-Sum)게임이 보편 타당한 진리이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다. 相生이니 윈-윈(Win-Win)게임이니 하는 신조어들이 더 이상 낯선 말들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다. 이는 일찍이 丹齋 申采浩 선생께서 ‘창조적 파괴’를 설파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產苦가 따르기 마련이듯이 개혁을 추진하면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이 생기고 나아가 극심한 사회 갈등을 겪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래서 改革을 두고 글자 그대로 ‘산 가족을 벗기는 일’이라 하는지 모른다. 그만큼 개혁은 고통스럽고 이루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더욱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길로, 같이 사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창조적 파괴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된다.

개혁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상충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개혁이 중도에 좌절되거나 그 내용이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개혁에 대해 총론에는 다들 찬성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즉, 개혁의 고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놓고 첨예한 갈등이 전개되기도 한다.

창조적 파괴로서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사전여건 조성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 등 협동조합 개혁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이다.

먼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제도와 체제가 더 이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을 때가 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누가 먼저 인식하여 변화를 시도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혁은 내부의 자각과 반성에서 시도되기보다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에 의하여 마지못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개혁의 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와 철저한 실천계획이다. 이는 곧 개혁의 내용을 받아들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100점짜리 개혁을 추진하다가 중도포기하기보다는 70~80점이라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단계론적 접근방법을 취해야 개혁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며 반개혁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동조세력이 광범위하게 포진해야 한다. 즉,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국회,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의 절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제도적 틀을 바꾸는 데서 끝이 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개혁의 취지와 방향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수시 점검·보완하는 소위 '제2단계 질적·소프트웨어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비로소 개

혁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혁작업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참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와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이다. 금융·기업·공공 부문 등 4대 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라 할 것이다. 비록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다. 우리는 개혁의 고통을 함께 지고 그 과실도 함께 한다는 작은 마음가짐으로 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하며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안전한 바다를 위하여



서정호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는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대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얼마나 경제적인가? 바다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 또는 외국의 선박운영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려고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규제를 참아줄 수 있을 것인가?

바다에서의 안전에 관한 일을 담당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의 일부이다.

올해에는 다행히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보다 줄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바다에서는 매일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일

어나고 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연평균 766건이 발생하였다. 하루에 평균 2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86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해양사고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유류오염에 의한 환경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금액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안전을 위한 투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순위 결정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많다. 국가의 경우 한정된 재정사정 때문에 거의 무한정으로 소요되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수익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설비를 갖추거나 종사원을 교육시키거나 하는 일들은 쓸데없는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대형 해양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후의 수습이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엄청나게 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

는 나라 또는 회사의 선박에 대해서는 비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발족되고 바다에 관한 행정이 일원화되면서 해양안전에 관한 정부의 노력이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상선과 어선의 안전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합리적인 업무분담은 해상교통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보다 훨씬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안전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육상의 도로교통표지와 같은 항로표지의 경우 매년 40여기 이상을 증설하고 전국 연안 8개소에 위성용 이용한 선박위치추정보정기준국(DGPS)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관제할 수 있도록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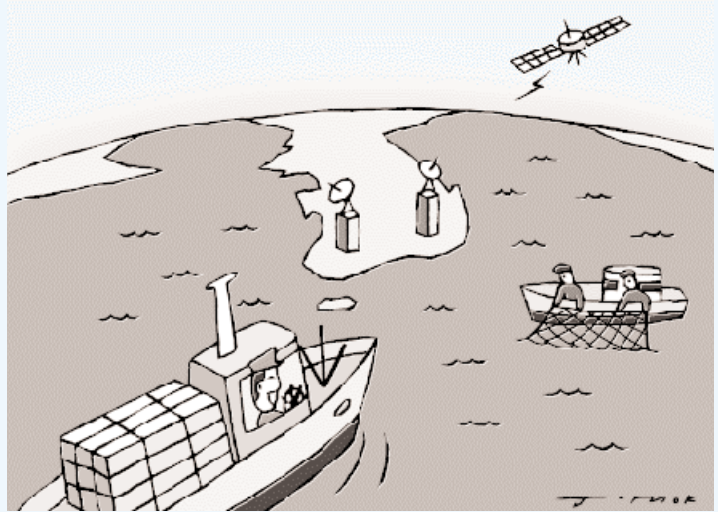
또한 우리 연안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도 해양오염 등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해양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우리 항만 입·출항을 통제하는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바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박운항자(선원), 선주 또는 선박회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해양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선박운항자의 인적 과실 또는 선박 자체의 결함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미국 영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 영화는 폭풍우 속을 무리하게 항해하던 작은 어선이 침몰되고 선원들 모두가 사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었다. 이 경우에 사고원인은 기상재해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빙시설이 낡아 고장난 상황에서 모처럼 많이 잡힌 고기가 상하기 전에 항구로 돌아 오고자 했던 선원들의 욕심이 더욱 중요한 사고원인이었다.

근래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연근해를 운항하는 선박 특히 어선의 경우에는 낡은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많이 있다. 일부 소형 어선은 중고 자동차의 엔진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의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선박



에 중고엔진을 달고 운항하여야 하는 어민들의 절박한 실정이 안타깝다. 그들인들 성능이 우수한 새 엔진을 달고 싶은 마음 이 왜 없겠냐는 생각이 든다. 나라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모두 교체해서 안전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올 상반기에 356건의 해양 사고가 있었으며 그 중 121건은 기관고장에 의한 사고였다. 우리 어민들에게 바다가 좀더 안전한 곳이 되도록 정부도 기관대체를 위한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지원 규모나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어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참 쉽게 잊는다.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쉽게 잊는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93년의 서해 횡리호

사고, 95년의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에 다행히도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대형 해양사고가 없었다. 최근 몇년간 바다에서 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그 비용을 아깝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바다에서는 사고가 나고 있고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관련분야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다를 찾거나 선박에 승선하는 일반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21세기에는 우리의 바다가 선진해양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재판매가가격 유지행위 등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에 대한 감시·감독을 통해 시장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자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앞쪽 왼쪽부터 송하성 경쟁촉진과장, 오성환 경쟁국장, 이삼봉 공동행위과장
뒷줄 왼쪽부터 배진철 서기관, 신호현 단체과장, 한철수 유통거래과장, 여형동 서기관, 신영호 사무관

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린다.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공익적인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를 운동경기에 비유하면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외국기업끼리의 인수합병이 국내 시장과 주가를 들쭉이게 만드는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와 거래행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시장구조 개선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문화를 반영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독점국과 조사국이 30대 기업집단을 선정해 총액출자제한제, 상호출자금지, 부채비율제한 및 부당 내부거래금지 등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거래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범세계적이고 할 수 있다. 세계 어디서나 자율시장경제의 필요악처럼 독과점이 발생하고 시장에서 우세한 사업자가 횡포를 부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의 부조리를 시정하는 것이 경쟁국의 몫이다.

사실 경쟁국 직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숨은 일꾼들이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재벌들의 구조개혁 등 굵직하고 생색나는 사안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를 제외한 거의 전부가 경쟁국 소관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업무의 영역이 방대하다.

업무내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결혼정보회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 1년에 10번 맞선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몇주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처벌을 호소했다. 지금까지도 직원들 사이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거래행태 개선보다는 시장구조 개선 쪽에 정책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업문화의 특성상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재벌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재벌개혁이 계획대로 마무리지어진 후에는 경쟁당국은 거래행태를 개선하는 쪽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경쟁국의 감시대상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재판매가

격 유지행위 등이다.

특히 경쟁국의 업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공동행위의 적발이다. 일반적으로 카르텔 또는 기업연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도 독과점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무서운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구두로 협의해 물증을 남기지 않는 등 수법들이 워낙 교묘해 적발이 쉽지 않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수적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도 경쟁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를 독과점과 동일한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비타민·흑연전극·라이신 등 국제카르텔을 적발, 13억달러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도 지난 98년 9월 15개 해운사의 국제카르텔에 대해 3억달러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경쟁국이 최근 큰일을 도모하고 있다. 오랜 관행으로 남아있던 정유사 담합문제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경쟁국은 예전부터 정유사들이 휘발유값을 올리고 내리는 등 가격담합을 일삼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혐의를 두고 있었으나, 여타 물증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연한 기회에 정유사의 가격담합이 꼬리가 잡힌 것이다.

이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는 것이 경쟁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쟁국이 잡아낸 굵직한 공동행위만도 여러 건이다. 최근에만 해도 8개 철강사 철근 가격 담합행위 외에도 에어컨 제조 8개사의 가격 등 담합행위, 5개 공공 공사에서 28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건을 적발해 총 4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자단체의 담합도 금지대상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다거나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의약분업과 관련한 병원 폐업사태 때 파업을 주도하고 회원 의사들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이 이 같은 맥락이다. 이때는 이례적으로 법인 두 곳과 간부진에 대해 검찰 고발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한법무사협회 등 각종 전문자격사단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

상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가 유통업자에 대해 그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도 금지대상이다. 제조업체 주도형 유통구조가 발전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체가 모든 대리점에 대해 같은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는 형태의 재



지난 4월 2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제3차 부당내부거래조사 심결 장면

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빈번한 편이다. 따라서 영세업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에서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일곱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명문화해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부당하게 거래의 시작을 거절하거나 그동안 해오던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 거절,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차별적 취급, 부당하게 경쟁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낮게 팔거나 높게 사는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유인하여 자기와 거래하게 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하게 다른 상품을 끼워 팔거나 자기회사 임직원에게 상품 구입·판매를 강제하는 거래강제, 자기

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인력의 부당유인,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경쟁국 직원들은 주위의 모든 것을 관심있게 지켜본다. 언제 어디서 소소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신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가 조사착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백화점·금융보험·프랜차이즈·정보통신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경쟁국의 감시대상. 그래서 최근에는 유명백화점의 세일실태와 납품업체에 세일비



용을 전가시키는 등 부당거래행위를 일제 점검했다.

경쟁국을 이끄는 수장인 오성환 국장(행시 14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과장, 총무과장, 조사국장, 소비자보호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내부에서도 가장 실무에 능통한 국장으로 통한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 및 행정학을 공부했다. 늦장가를 간 탓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그는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다. 자녀들과 여름 휴가 때 놀이동산에 놀러가기로 약속했는데, 최근 정유사 담합 문제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탓에 휴가는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쟁촉진과의 송하성(행시 22회) 과장은 경쟁국 과장 가운데 최고참.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통한다.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았

던 그는 최근 2년여의 노력 끝에 '공공재의 과다공급과 비효율의 최소화 방안', '주인-대리인 모형에 입각한 공기업 개혁 방안' 등 두 건의 논문을 펴냈다. 경력도 화려해 파리 1대학(경제학 박사)과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2과장과 공동행위과장, 총괄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공무원이었던 부친의 회고록을 펴낼 만큼 효심이 지극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386세대 송영길 의원이 그의 동생이다.

유통거래과 한철수 과장(행시 25회)은 전북대 경영학과와 미국 시라큐스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법률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 2과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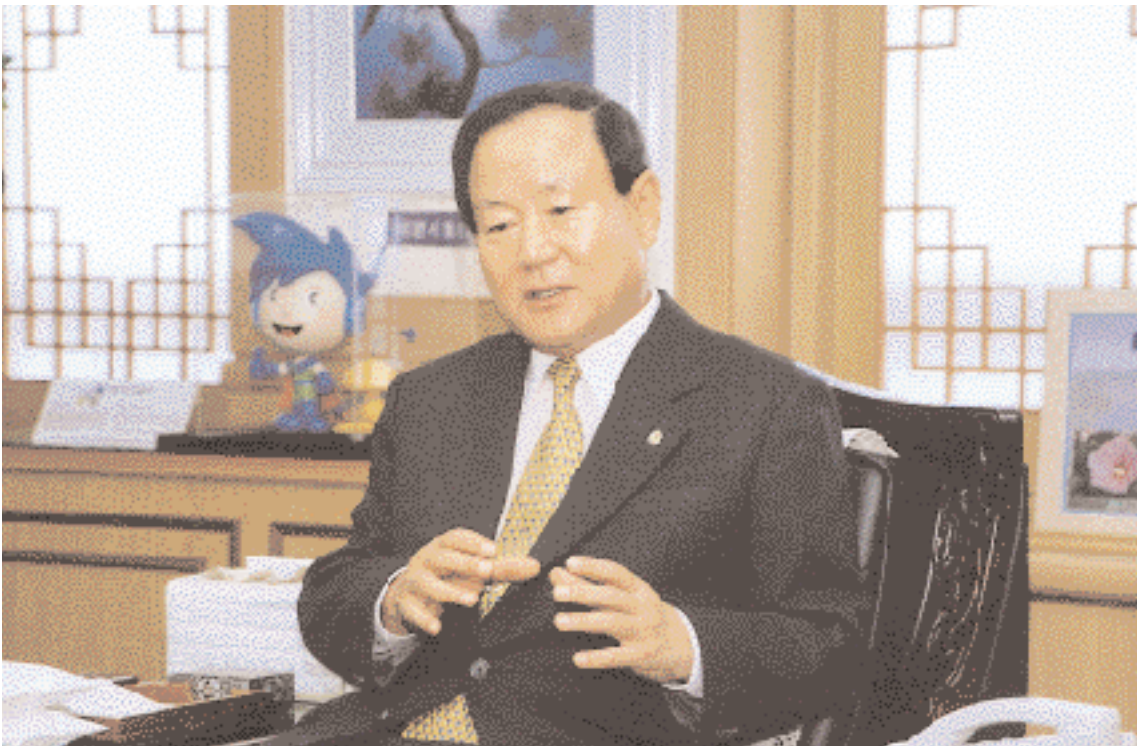
공동행위과 이삼봉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광고경품과장, 기획예산담당관, 하도급1과장을

역임했다. 공정위 업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카르텔이나 담합 등 공동행위를 가리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다. 경쟁국의 현안 과제인 정유사 담합건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과 신호현 과장(행시 22회)은 외무부를 거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외무부 서남아과, 통상기구과 사무관을 거쳐 9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업무1과장, 하도급과장을 지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경제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경제학적 시야에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최근에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병원폐업건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시절 공정거래실로 출발해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최고의 부처로 자리잡았다. 커진 위상만큼이나 시장이 바라는 역할과 기대감도 커졌다. 그 중에서도 경쟁국은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실물경제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경쟁국 직원들이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형평성과 잣대를 가지고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글 · 박선영/세계일보 경제부 기자



홍 선 기

대전광역시장

때 2000년 8월 16일

대담 김인철 本誌 편집장

— 먼저, 제2의 행정도시, 과학기술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이끌어 가시는 시장으로서의 시정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정 운영의 목표를 ‘대전경제 키우기’와 ‘대전 사랑’에 두고 신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도시 규모에 비해 산업구조와 지역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문화·복지·교육·환경 등 각 분야에서 제2 수도로서의 위상에 맞게끔 현대화된 도시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은 여러 지역 출신의 다양한 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시민이 우리 삶의 터전인 대전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 연초에 ‘위대한 대전 비전 2020’을 선포하여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새 천년 벽두에 발표한 ‘위대한 대전비전 2020’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 전략으로서,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밝은 미래를 위한 우리 시정의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대전은 인구 220만을 수용하는 인간중심의 비전 있는 도시, 지역총생산액이 10배 이상 신장된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 전국이 1시간대 생활권이 되며 첨단교통시스템이 운영되는 편리한 도시, 주택보급률이 109%에 이르러 시민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된 쾌적한 환경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 올해는 시정운영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올해에는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을 집중육성하여 2001년까지 500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종합예술의 전당,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등 대형 도시 기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심 활성화와 수도권 주요 기관·기업의 대전 이전, 전자시정구현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선 1기부터 일관되게 ‘대전경제 키우기’에 최대 역점을 두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첨단과학·지식정보·물류유통 등 3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생명공학·정보통신·영상산업·정밀화학·신소재 등을 5대 특화업종으로 육성하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하나하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 120개이던 벤처기업이 현재 360개로 3배나 증가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 중 벤처기업의 창업신장률이 가장 큰 벤처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물류유통 거점기지 건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울



해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안영동 농산물물류센터가, 4월에는 대전종합유통단지가 착공되었습니다. ‘특허타운’·‘애니메이션타운’ 조성, ‘생명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등 21세기를 선도할 지식정보산업 기반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충남·북과 연계되는 ‘대덕밸리’에 대해 경제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 ‘대덕밸리’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최첨단 벤처단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산·학·연 합동화 프로젝트입니다.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과학산업단지와 대전 제3·4산업단지 및 엑스포과학공원과 유성온천지구·둔산신시가지 일대를 축으로 연결하고, 광역적으로는 아산테크노파크와 충북 청원·오창 등을 엮는 중부권 ‘3각 테크노벨트’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덕밸리 지역을 ‘정보통신서비스 특구’,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의 협동화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의견, 특히 대전광역시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수도권의 집중·과밀 해소와 광역적 지역발전 선도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개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충청권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과 대전·청주권 개발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대전~청주공간고속도로 건설, 컨벤션센터 건설 등을 하루바삐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본점, 해양경찰청 이전 등 수도권 소재기관 대전이전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기대합니다. 가능하다면 일부 중앙부처도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이전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성사시킨 갑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가 지자체 차원의 외자유치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90년대초부터 시작되었는데 97년말 경제위기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 직접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외자유치에 나섰고, 프랑스 이시스社, 싱가포르 화흥공사, 두산건설과 99년 2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 재정 투입시 30년이 소요될 사업이 3년 안에 완공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단기간내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집중 투자됨에 따라 대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는 좀 낮이 쉽니다.

▲ WTA는 세계 과학도시간 협력과 과학기술을 통한 번영을 목표로 98년 9월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국제협력기구로 13개국 27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도시간 정보네트워크 구축, 연구소·대학간 과학기술 연구협력, WTA 테크노마트 개최, 전자·무역박람회 개최, 연구단지 개발 협력과 해외시장개척 상호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초대 회장도시로서 대전에 사무국을 두고 WTA운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제2차 WTA총회에는 북한 과학도시를 초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11월 대전에서 제1차 WTA 테크노마트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001년에 제2차 WTA 테크노마트가 대전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 대전시청 청사가 전국 자치단체 청사 중

규모가 큰 편인데다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청사는 시민이 '主人'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사는 42년 된 건물로 낡고 비좁아서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 임차해 들어가 있는 바람에 행정의 비능률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드렸었습니다.

신청사 준공으로 흩어져 있던 여러 부서들이 한 곳으로 들어오고 첨단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뒷편에 1만3천여 평의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등 21%를 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건물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물자동화시스템, 사무·정보 통신자동화시스템, 중수도 및 빙축열시스템, 절전형 전자식조명과 광센서제어장치, 진도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이전 초기에는 지나치게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시민이 시청을 방문하고 나서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0'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이벤트성 국제행사에 대해 비판이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도시다운 기획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새 천년 문화관광축제로서 첨단과학도시의 정체성을 높이고 과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1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여드는 등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고 있



습니다. 전시관람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로봇 체험, 암석과 화석 탐구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와 캐릭터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병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개최하는 과학축제여서 아쉬움도 있으나, 앞으로 정례화하여 내실있는 과학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전을 과학기술도시·지식 정보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 대전은 고급 과학기술 인력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 우리나라 지식정보산업의 중핵도시 그리고 중부권 물류유통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가운데 '인간중심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을 가꾸기 위해 150만 대전시민이 창의적인 사고, 개척하는 정신, 진취적 행동과 화합하는 지혜를 모아 위대한 대전, 긍지높은 시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로 떠오르는 대전

장동만

대전광역시 공보관



통의 도시'로 인식되어 왔던 대전의 정체성이 '과학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변모되고 있다.

대전은 1914년 회덕군, 진잠군과 공주군 일부가 합쳐져 대전군 대전면이 설치된 후 1931년 4월 대전읍으로 승격되었다. 1935년 10월 대전부로 승격됐다가 광복 후인 1949년 8월 지방자치치가 실시되면서 대전시로 개칭되었으며, 1989년 대덕군지역을 편입시켜 직할시로 승격된 후 1995년 다른 직할시와 함께 광역시로 개칭되었다.

대전광역시의 총면적은 539.71km²이며 행정구역은 5개구 76개 행정동, 1999년말 인구는 136만 8천명이며 올해 시분청 총예산(당초예산)은 일반회계 6,478억원과 특별회계 6,821억원 등 총 1조 3,229억원(자치구 포함 1조8,024억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4,835억원, 국고보조금 등의 존수입 1,643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74.6%이다.

대전은 1905년 경부선철도 개통, 1932년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 등을 계기로 도시의 성장속도가 다른 여느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대전청사, 3군본부가 소재한 제2의 행정수도일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와 특허법원이 위치하고 있어 지식·정보·첨단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통·국토계획의 중심지이며 四通八達의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어 첨단과학산업과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희망의 도시이다.

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본격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난 5년 동안 대전광역시는 이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시정의 중점을 두고 진력해 나가고 있다.

대전은 시정의 나갈 방향을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를 열자"로 정하고 '잘 사는 대전', '배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대한 대전시대를 위해 첨단과학기술도시·지식정보산업도시·물류유통거점도시 건설 등 소위 3대 중심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를 위해 대전사랑운동 및 '창의·화합·개척'의 대전정신 확산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첨단과학산업·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대전광역시는 무엇보다도 대덕연구단지의 풍부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인 첨단과학산업도시로 육성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이미 지난 98년 9월 대전시가 주도하여 11개국 22개 과학도시가 참가한 WTA(세계과학도시연합)를 창립하여 현재 가입도시가 13개국 27개 도시에 이르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세계과학도시들의 중심적 위치가 날로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1999년 10월에는 제1회 대전테크노마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간 기술거래시장의 거점으로



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또한 12개 분야의 과학동호회·대덕과학포럼 구성 운영,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 과학기술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는 등 학술적 지원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들의 과학사랑 정신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북의 벤처기업 700여개의 연합체인 '21세기 벤처패밀리'가 출범, 기술·사업 제휴 등 협력을 도모하는 벤처기업 성장 붐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조 위에 지역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개 기관 500실의 창업보육실(BI)을 운영해 창업단계의 기업을 보육하고 다산관·종합영상관·장영실관·소프트웨어관·정보통신관 등에 160여개의 성장단계 벤처기업

을 입주시켜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중 구도심지역 유희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과학산업단지·대전 제4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 등에 벤처전용단지, 협동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벤처기업의 창업에서 성장·정착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유성 등을 중심으로 충남과 충북을 연계하는 대덕밸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 최근 들어 '대덕밸리', '대덕바이오밸리', '첨단산업의 메카, 대전' 등의 말이 확산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를 기점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 대전 제3·4산업단지, 엑스포과학공원과 유성온천 및 둔산 신시까지 일대를 아우르는 이 곳 벤처중심지역 일

대에는 현재 350여개의 공인된 벤처기업과 창업보육단계에 있는 400여개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대덕밸리가 경영정보 등에서 서울지역보다 다소 뒤떨어진다 하여 성장단계의 기업들이 테헤란밸리로 이전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영정보보다 첨단과학기술정보의 획득이 기업성장 발전의 핵심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성장단계의 기업들이 서울지역에서 대덕밸리로 U턴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벤처기업전용빌딩 건립·운전을 추진하는가 하면, 최근 8월에는 일본에서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덕밸리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대덕밸리의 육성시책에 대한 성과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태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대덕엔젤마트 운영, 벤처투자조합 결성 등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직접투자방식 위주로 전환하였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전면적으로 재손질할 계획이며, 9월중에 대덕밸리 선포식을 갖고 대덕밸리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육성책이 가시화되면 현재 고용 4,500여명에 매출 5천억원 정도인 대덕밸리가 오는 2005년에는 고용 3만7,500여명에 매출 2조5천억원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벤처메카로 자리잡을 것이다.

대덕밸리 육성 외에도 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최근 국내 최우수 운영 평가를 받은 바 있고 TJ-Mart를 개설·운영하여 99년 12월에는 e-Trust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대전발명특허박람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군수마트도 개최할 예정이어서 과학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면모가 날로 확고해질 전망이다.

또한 물류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대정동 물류종합유통단지, 노은농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영동 물류유통센터 등 물류유통 3대산업을 착수하여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4차산업인 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엑스포 국제전시구역에 8만여평 규모의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제4차 국토종합건설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대전광역시는 이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3대 중심산업 육성에 시정의 중점을 두고 있지만 환경과 개발의 조화, 문화복지 등 선진도시 건설과도 조화를 이루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

〈표〉 대전광역시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천명, %)

	IMF 이전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 5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561	581	595	610
실업률	2.9	7.9	4.9	3.6
산업생산지수(원지수) ¹⁾	111.3	101.2	107.4	116.8
제조업 가동률	79.9	67.2	82.3	83.3 ³⁾
여유 부도율	0.79	0.30	0.27	0.37
소비자 물가지수 ²⁾	110.7	117.3	119.1	119.3

주 : 1) 1995년 = 100
2) 1995년 = 100
3) 2000년 1/4분기

‘위대한 대전비전 2020’ 추진

시정의 나아갈 지표를 명확히 하고 2020년의 대전 발전 목표를 정한 ‘위대한 대전비전 2020’ 계획은 일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청사진의 일부이다.

지금까지 추진한 시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3대 중심산업을 중흥시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중심의 과학기술 도시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활기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 ②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③ 미래지향의 비전 있는 선진도시 ④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⑥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⑦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도시 등 7대 분야의 발전전략을 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첫째, 활기가 넘치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세계 최고의 과학산업단지 조성, '첨단과학산업 특구' 지정, 생물·의약산업 지원센터 건립, 미디어랜드 및 애니메이션타운 조성 등을 추진해 대전을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메카 도시로 육성시켜 나가는 한편,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 대전종합무역센터 건립, 대전컨벤션센터 건립 및 신서비스산업 유치지구 지정 등을 통해 국내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를 위해 외부적으로 四通八達의 고속도로망을 더욱 확충하고 도심 대중교통과 외부도로망의 통합대중교통망을 운영하며 과학도시답게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IS(첨단교통정보시스템)를 도입해 환경친화적 녹색교통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교통수요를 관리하여 편리하고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미래지향의 비전 있는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중부권 중핵도시로서 광역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핵형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하고 토지이용의 입체화 등을 통한 토지이용 고도화, 대전역 텔레포트 조성 등을 통한 국제도시 기반구축,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등을 도모해 인간 중심의 비전 있는 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청정연료 사용정책 추진으로 자연의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3대 하천 수질개선 등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폐기물 관리의 첨단화,

종합환경단지 조성, 생태그린 네트워크 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조록대전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깨끗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위해 복지예산 확충, 자원봉사 활성화, 최고수준의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노인보건의료기반 조성, 장애인 자활 교육 강화, 질 높은 보건·의료환경 조성 등도 추진하여 모든 시민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예술인 창작단지 조성, 감천수상문화공간 공원 조성으로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대전박물관 건립 및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의 종합스포츠센터화, 대전국제교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세계로 열린 격조 높은 도시건설을 지향할 것이다.

일곱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의 시정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작고 유연한 행정체계를 갖추며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자치적 봉사행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자시정 2020'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기업·일반시민 등 지역의 전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여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위대한 대전비전 2020' 장기발전 계획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시정의 역점을 두어 대전중흥의 대장정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 ■

‘인간 · 정보 · 환경 하이웨이 2000’

고채석

한국도로공사 전략기획팀장

8월 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공공기관 우수 혁신사례로 보고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고속도로 건설 · 관리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섬기는 경영’ 과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편집자>

창

립 31 주년을 맞은 우리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2,050km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섬기는 경영’ 과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99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실적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우리 공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고속도로 건설 관리라는 21 세기 한국도로공사의 목표이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교통물류정보시스템 · 하이패스시스템 개발로 물류비용 · 운행소요시간 감소

고속도로의 지 ·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물류정보시스템(TLIS : Traffic &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상의 교통전자지도를 통해 실시간 고속도로 지 · 정체 현황, 도착지 기준 소요시간, 구간별 통행 예측정보, 미래시간 통행예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교통정보 욕구 충족 및 교통지체로 인한 국가물류비 감소를 위해 개발된 것이다.

교통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는 노선별 소요시간을 미리 알아본 후 보다 빠른 노선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운행경로를 최적화하게 된다. 교통상황별로 정체 · 지체 · 소통원활 구간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소통상황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 결과 현재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서울-대전, 서울-월정 구간의 요일별 운행소요시간과 전 구간 실시간 고속도로 지 · 정체 현황 등 교통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2001년 시스템이 완전 가동되면 교통혼잡이 완화되고 통행소요시간이 감소되어 연간 1,500억원의 물류비용, 교통혼잡 30%, 교통사고 사망자 50%, 여행시간 25%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통행요금을 내기 위해 톨게이트에서 정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장비에 의해 통행료를 자동지불하는 하이패스(Hi-pass, 논스톱 통행료 징수)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량의 안테나와 차량에 부착된 차량탑재기(OBU)간에 무선통신을 이용한 각종 정보의 송·수신을 통하여 차량탑재기에 삽입된 하이패스 카드의 충전금액에서 통행료가 자동으로 빠져 나가게 하는 시스템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지난 4년간의 연구를 거쳐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최첨단 요금징수체계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동남아시장 개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판교·성남·청계 톨게이트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차량 한대를 처리하는 시간이 2.5초로 기존 방식보다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톨게이트에서의 지·정체와 통행료 징수관련 고객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공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포함한 개방식 영업소와 폐쇄식 영업소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이 시스템을 전 톨게이트에 25% 설치할 경우 요금소 징수요원 및 차로건설비용 등의 감소로 3,200억원의 관리예산이 절감되고, 교통지체 해소 등으로 2,130억원의 물류비용 감소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복합 휴게문화공간으로

비싼 물품가격과 불친절로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이 많았던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국민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우선 휴게소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휴게소 운영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했다. 그러나 수익성 악



고속도로의 지·정체현황, 소요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

화를 우려한 운영업체는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각 휴게소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우수업체에게는 인증패와 재계약시 우선 배려,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휴게소 입찰금액 상·하한제 적용과 임대료제도 개선을 통하여 운영업체를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판매상품의 가격을 내려 '휴게소 상품은 비싸다'라는 그동안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편의점 상품 1,700여 품목의 가격을 평균 20% 일괄 인하하였고 유류가격도 인하하였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서비스 실명제 및 불친절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서비스를 호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실제로 불친절로 지적된 휴게소 종사원 87명을 경고조치하고 17명을 퇴출시켰다. 또한 화장실을 24시간 음악과 향기가 흐르고 꽃과 그림이 있는 쾌적한 또 하나의 쉼터로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앙언론사로부터 2년 연속 공공서비스 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고 '아름다운 화장실', '전국 Best 화장실', '99 장애인 시설 관리 우수기관' 등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찬사와 표창을 받았다.



휴게소를 복합 휴게문화공간으로 개선하였다. 사진은 폐적해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9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으며(97년 : 52점 → 99년 : 75점) 이용객 민원제기도 월평균 12건에서 5건으로 58% 감소했다.

앞으로는 '휴게소 등급 표시제'를 도입해서 휴게소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교통·관광 안내는 물론이고 이동중에도 업무지원이 가능한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며, 지역안내 등 관광진흥 지원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음악회 및 전시회 개최, 조각공원 설치 등으로 휴게문화공간 개념을 재정립하고 첨단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보완으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복합 휴게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고속도로를

우리 공사에서는 이 밖에도 그동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수림대와 꽃길을 조성하여 '숲과 꽃이 어우러진 푸른 고속도로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樹木기증제'를 시행하는

등 더욱 쾌적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등 194곳에 자생종 위주로 수림대를 조성하고 꽃길을 만들어 생태계를 복원하였으며, 올해에도 155개소에 경관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교량(Eco Bridge)'과 전용통로박스도 설치했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선형개량, 화물차 적재함 박스화 추진 및 적재불량·과적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 등을 통하여 안

전과 생명중시의 고속도로 건설·관리체계를 확립해 가고 있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7×9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과 2004년까지 총연장 3,400km의 전국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게 하여 '전국 만나질 생활권'을 실현하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통한 지능화·첨단화된 고속도로, 교통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통소통의 효율을 제고할 것이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창립 31주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관리하지만 그 길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유산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고속도로를 고객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하며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아갈 것이다. 이용객 여러분들도 고속도로를 많은 애정을 갖고 아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단계 기업구조개혁 추진



장건상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
(Insurer@mofe.go.kr)

6 · 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IMF 경제위기는 외형상으로는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폐해가 누적되어 표출된 결과였다.

특히, 막대한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의 지불능력 저하로 발생한 중남미의 경우와는 달리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기업부문의 과다·과오 투자가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5+3대 원칙'에 따른 구조개혁으로 재무구조 상당부분 개선

이러한 기업부문의 부실은 90년대 이후 급속한 자본자유화 속에서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투자확대를 견제할 기업 내·외부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간에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확립되지 못하였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불합리한 투자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위기극복의 해법을 찾고자 했다. 특히, 기업부실은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져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기업개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이들 정책은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정당성을 누름으로써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해 一過性 개혁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재계 등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의 틀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현 정부의 기업구조개혁 과제는 98년초 대통령 당선자와 재계간 합의에 의해 마련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과 동 원칙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 3대 원칙'(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변칙상속·증여의 방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위기극복을 위한 당면과제일 뿐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경

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대적 당위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이 '5+3대 원칙'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그리고 정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기업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대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가 해나가되, 채권금융기관은 신용을 공여한 자로서 구조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데 주력하였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 스스로가 건전하게 되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권 정리 등 IMF 위기 직후 추진한 금융구조조정은 결국 기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1단계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수 있었다.

금융기관에 의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별작업이 진행되었고, 워크아웃 제도도 도입되었다. 재별기업들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정부로서는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소수주주권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내부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M&A에 의한 기업인수권시장의 활성화 등 기업외부로부터의 견제장치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의 힘에 의한 기업감시기능을 강화

정부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신용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借主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2금융권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다.

하고 기업 스스로 투명·책임 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선진화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갱생 및 퇴출지연에 따른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줄일 수 있도록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기업구조개혁은 기업들의 경영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IMF 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패턴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주주중시의 경영과 시장을 존중하는 경영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877개)의 부채비율은 98년보다 무려 131% 감소한 148%로 나타나고 있고, 30대 그룹(4대 그룹) 평균부채비율도 98년말 380%(352%)에서 지난해 말에는 219%(174%)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407개 상장 제조업체의 경상이익도

〈표〉 경제적 부가가치 순창출 기업수(EVA+)

(단위 : 개, %)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EVA+ 기업수	180	174	165	163	163	104	164	184
EVA+ 비중	35.4	33.9	31.1	29.1	29.1	20.0	33.5	39.5

98년말 1조3천억원에서 99년말에는 16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조사한 경제적 부가가치(EVA : 세후영업이익-투자자본비용) 분석에 있어서도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순 창출한 기업이 92년 분석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불과 2년 반 동안의 기업구조개혁만으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등 경영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업의 경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구조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기업구조조정 추진

정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구조개혁을 위한 '5+3대 원칙'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일선 경영현장에서의 관행과 인식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올해부터 지금까지의 구조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2단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지속적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

그동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고, 수익성도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차입금 비중이 높아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7.14)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제조업의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본)×100]는 42.8%로서 외환위기 직후인 97년말(54.2%)보다는 낮아졌으나, 미국(98년 27.4%), 일본(98년 33.7%)은 물론 대만(95년 25.3%)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금융비용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도 99년 1.24 수준으로서 90~97년간 평균치(1.31)를 하회하고 있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본)도 0.82 수준에 그쳐 미국 1.02, 일본 0.99은 물론, 외환위기 이전 수준(90~97년 평균 0.9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차입금 축소, 수익기반 강화와 함께 비핵심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그간의 재무구조 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세계시장에서 스스로의 신용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 은행권에 도입된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99회계연도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30대 기업집단 중 실제 작성·제출 대상 16개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를 철저히 감리하는 한편,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등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산정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기관의 충신용공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해 나갈 것이다. 적용대상은 전체 금융기관 충신용공여가 2,50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 전체 금융기관 충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사후점검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용해 나갈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착에 노력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

력으로 주주 중시의 경영이 확산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발견되고 있으나, 아직 일선 경영현장에서 관행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달라진 법과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미 상장기업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비중을 2분의 1 이상(3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이사회의 활동내역,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사외이사 현황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재·공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점검결과와 전문가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기업회생 및 퇴출관련 제도를 개선

지난 98년 6월 도입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써 해당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부도유예협약 등 구제금융(bail-out)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IMF관리체제 직후 회생 가능한 기업이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에 의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성장잠재력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워크아웃 기업 중 31개 기업(99년중 2개, 올해 9월까지 29개 예정)은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고 독자 경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워크아웃이 부실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舊기업주와 경영진이 경영권 확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워크아웃이 본연의 목적에

76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 결과 워크아웃 조기졸업 및 중단 결정을 내린 32개 기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고, 워크아웃 계속 추진기업에 대해서는 11월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킬 것이다.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관련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먼저, 지난 5월에 실시된 76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결과 워크아웃 조기졸업 및 중단 결정을 내린 32개 기업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고,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에 대해서도 11월중 회생가능성 여부를 재점검하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킬 것이다.

또한 지난 7월에 실시된 워크아웃 계속추진기업(44개사)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영진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추궁을 해나갈 것이다.

한편, 워크아웃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bankruptcy)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제도 등 선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 각 계열사의 매각·회사분할 등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계열사별 독자적 경영정상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기업구조개혁 5+3대 원칙’ 관련 주요 법·제도 정비 실적

- 경영 투명성 제고(증권거래법, 외감법 개정)
 - 결합재무제표를 99사업연도부터 조기도입(당초 2000년)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준칙 제정(98.10)
 -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선임위원회’ 구성 의무화(98.2)
 -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최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99.2)
-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98년 4월부터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및 기존채무보증의 2000년 3월말까지 해소 의무화(98.2, 공정거래법 개정)
 - * 98년 4월 26조9천억원의 상호지급보증이 2000년 3월 0원으로 26조9천억원이 축소
- 재무구조의 개선
 -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 이상)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제도를 2000년부터 실시(98.2, 법인세법 개정)
 - 유상증자요건 폐지(98.2), 뮤추얼펀드 설립 및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근거 마련(98.9)
 -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시 특별부가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98.2), 구조조정용 자산취득자에 특별부가세 및 양도세 감면(98.9) 등 세제 지원
- 핵심역량의 집중
 - 「회사정리법」·「화의법」 등 도산관련 법제 정비(98.2, 99.12)
 -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전면허용(98.5), 기업분할제 도입 및 세제지원(98.12)(상법 등 개정)
-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상법, 증권거래법 개정)
 -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98.2)
 - 대표소송(1%→0.01%)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98.2)
 - 경영권 행사 지배주주에 대한 사실상의 이사제도 도입(98.12)
 - 소액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도입(98.12)
-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 개선(99.12, 증권거래법 등 금융업법 개정)
 - 재벌계열 제2금융권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 등 도입
 -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 강화를 위하여 자산운용규제 및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
 - 경영책임의 강화를 위하여 재산 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추궁을 쉽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 차단(99.12, 공정거래법 개정)
 - 3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타회사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99.12 공정거래법 개정)
 -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하여 시행을 1년간 유예(2001년 4월 시행)
 - 10대 대기업집단 계열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후 공시토록 제도화(99.12, 공정거래법 개정)
- 변칙상속·증여의 방지대책(99.12, 상속·증여세법 개정)
 -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확대(50억원→30억원), 세율 상향조정(45%→50%)
 - 변칙적인 금융기법을 이용한 상속·증여 방지
 -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상장 후 3개월 시점 기준) 등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
 - * 동일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시 과세 강화(1회, 액면가액 20%→시가 5%, 10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율을 30% 이내로 제한(위반시 가산세 부과) 등

한·중 어업협정 정식서명



손재학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

2 세기 중반까지는 해양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없어 해양의 관할과 이용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을 예방 또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10일 119개국의 서명(이후 40개국이 추가서명)으로 UN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이후 60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1년 후인 1994년 11월 16일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을 미루어 왔던 주요 조업국인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도 1996년에 한국을 시작으로 서둘러 이 협약을 비준하고 UN해양법체제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간에는 1999년 1월 22일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었고, 일본과 중국간에는 2000년 6월 1일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국이 각각 200해리를 주장하기에는 양국 사이의 해역의 폭이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경계를 획정하려는 과정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점 및 대륙붕 등과 관련된 여

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양국은 우선 경계확정 이전의 잠정약정으로서 어업협정의 체결을 추진해 왔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규모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업자원의 남획과 어장경합에 따른 우리 어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어업협정의 체결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한·중 어업협정 정식서명

위와 같은 국제적 동향 및 국내적 필요에 따라 추진한 한·중 어업협정은 93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후 5년간의 협상기간을 거쳐서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중인 98년 11월 11일 양국 협상대표간에 협정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한 바 있다.

통상 가서명된 협정은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우리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를 조속히 거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정식서명을 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나, 한·중 어업협정의 경우 가서명 이후 양자간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 서로 주장이 맞서 일단 정식서명을 미루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별도 협상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왔으며,

한·중 어업협정 발효 지연으로 인한
연간 약 3천억원 정도의 우리
어업손실을 최소화하고,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상
타결은 불가피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나
중·일 어업협정 때보다 넓은 평균
60해리의 관할수역을 확보하였다.

이번에 상호 타협점을 찾는 데 성공함으로써 지난 8월 3일 북경에서 권병현 주중대사와 탕자쉬엔 중국외교부장이 협정에 정식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한·중 어업협정이 협상의 시작으로부터 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여 가서명되는 데까지 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협상의 전 과정에서 한·중 양측의 이견은 매우 컸다. 왜냐하면 막대한 규모의 어선세력이 우리의 서·남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려 했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는 연안국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양국의 입장은 협상의 타결을 불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1998년에 들어서 '과도수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수역에 과도수역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협정발효 후 4년) 동안은 상대국의 어선이 연안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에는 연안국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우리로서는 과도수역을 포

함한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35해리)나 중·일 어업협정의 경우(52해리)보다도 넓은 평균 60해리를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안국 관할수역 평균 60해리 확보

한·중 어업협정의 구성은 본문 16개 조항과 2개의 부속서 및 양해각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정의 적용대상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였다. 따라서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내 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협정의 적용대상수역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성격의 수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배타적 어업수역이다. 이 수역은 연안국이 상대국 어선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으로서 중국어선이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아무리 조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부여하는 조업조건에 따르지 않고서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수역이다. 따라서 이 수역을 그냥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둘째, 잠정조치수역이다. 이 수역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 마주보는 해역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다.

셋째, 과도수역이다. 이 수역은 잠정조치수역과 배타적 어업수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측과 중국측에 각각 일정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4년간은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편입된다. 다만, 4년의 기간 중이라도 우리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는 중국측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규모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감축해 나가야 한다.

넷째,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다. 이 수역은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위치해 있는데 양국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영구적인 경계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부수역'으로 표현하여 어업적 측면에서 상호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

양자강 수역 조업은 협정발효 2년 후 잠정중단

한편 한·중 어업협정이 가서명된 이후 발생한 양자강 수역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문제는, 당초(가서명 당시) 우리측이 안보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서해 5도 주변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에 상응하여 중국측도 꽃게·갈치·조기 등 주요 어족자원이 산란하는 양자강 연안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우리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강 수역에서 우리 어선에 적용될 제한의 내용이 중국측 국내사정으로 가서명 당시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의 규정이 공포되면서 이의 적용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즉, 가서명 당시에는 양자강 연안에서 시기와 구역에 따라 2~3개월씩 조업이 중지되는 휴어구 및 보호구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 중국측이 양자강 수역의 심각한 자원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양자강 연안에 연중 조업이 금지되는 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중국어선에 적용하는 동시에 우리 어선도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수역은 그동안의 남획으로 인한 시급한 자원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서명 당시 서로가 양해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이후 양측은 양자강 문제를 둘러싸고 1년 이상 별도협상을 지속하였으나 서로의 원칙적인 입장만을 반복할 뿐 아무런 타협점도 모색하지 못하고 지리한 시간만을 소모한 결과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협정의 발효만 지연시키게 되었다. 이에 양국은 더 이상 결론이 나지 않을 이론 논쟁은 접어 두고 상호 수용가능한 선에서 실용적인 해결방안

을 찾기로 하여 이번 합의된 타협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합의내용의 골자를 보면, 협정발효 후 2년 동안은 한국어선들이 양자강 수역에서 계속 조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중국측의 자원보호조치에 협조하여 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되, 향후 양자강 수역의 어업자원이 회복될 경우에는 재입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측이 교섭과정에서 현재 조업이 금지된 양자강 이외 지역의 중국어선들이 양자강수역 자원상황 호전에 따라 다시 조업할 수 있게 될 경우, 우리 어선의 재입어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중국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최종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실적을 보면, 95~97년도 3개년 평균 약 650여척(쌍끌이의 경우는 통)이 조업하여 봉장어·꽃게·갈치·옥돔·조기·부세·병어 등을 연간 약 2만4천t 정도 어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업종 전체의 총 어획량 중 약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98년 이후에는 양자강 수역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활동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섭결과로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양자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최선의 결과이겠지만, 주어진 상황하에서 협정발효 지연으로 인한 우리의 어업손실(연간 약 3천억원 추정)을 최소화하고,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의 분쟁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협상의 타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또한 그간 각종 경로를 통하여 수렴된 어업인 의견도 전체 국익 차원에서 조속히 양자강 문제를 타결하는 방향으로 모아진 바 있다.

다만, 양자강 연안에서의 조업비중이 높은 어선들과 동중국해에서의 조업이 활발했던 어선들의 경우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부 조업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협정발효 후 2년 동안은 한국어선들이 양자상 수역에서 계속 조업하되 그 이후에는 양자강의 어업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 정부는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협정발효와 동시에 필요한 지원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정식 발효시까지 배타적 어업수역 내 조업허용 협상 등 과제 남아

이번 정식서명으로 한·중 어업협정의 토대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중 어업협정을 조기에 발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절차가 이행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협정에 대한 비준절차를 거쳐 양국이 협정을 발효시키지는 공한을 서로 교환하는 날부터 한·중 어업협정은 정식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협정을 발효시키기 전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국의 배타적 어업수역 내에서 상대국 어선의 조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조업척수뿐만 아니라 어업의 방법, 어구의 형태, 조업기간, 조업구역 그리고 어획허용량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우리가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수역에서 과도하게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우리의 어업자원을 보호하

고자 하는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중국어선의 척수 및 조업조건은 최대한 제한하는 반면 중국수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우리 어선의 척수 및 조업조건은 가능한 현행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협상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방적 욕심만으로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한·중간에는 양국간 어선 세력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의 최종 합의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말까지 상호입어척수 및 조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한·중 어업협정을 정식발효시켜 새로운 어업질서하에서 상호입어를 실현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한·중 어업협정 추진 과정에서는 우리 어선의 조업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해양법전문가 및 어업인대표로 구성된 '어업협상대책협의회'의 자문과 검증을 통하여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시로 어업인과의 간담회 및 현지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협상을 통해서도 최대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우리의 계획대로 내년에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한·일 어업협정과 일·중 어업협정에 이어 동북아 3국이 모두 양자적 어업관계를 맺게 되어 UN해양법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3국이 공동으로 동북아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강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정연만
환경부 환경평가과장

최 근 몇년 사이 '선 경제개발-후 환경보전' 대신에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다.

고갈돼 가는 자원의 남용을 막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훼손과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며, 후손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구현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성장위주의 개발정책 추진에 따른 고도성장 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이란 후유증을 앓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또는 개발을 선호하는 대다수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오히려 오히려 환경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수질오염·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8월부

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이나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리 입지의 타당성이나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 환경성을 검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299호)」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존목적의 용도지역 내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시행되어 왔다.

국토이용계획이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규정에 따라 환경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왔다.

한편,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이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15만㎡ 이상)과 같은 대규모의 63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의 저감방안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시의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는 한편, 협의의 절차 및 기간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선·보완되었다.

등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는 환경영향 평가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①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② 주로 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후 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③ 입지의 타당성보다는 오염의 저감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차이가 있다.

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그 대

상을 공공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민간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비록 입지가 부적정하다 할지라도 이를 제한할 수단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사전협의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계획의 입안시 환경성의 고려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대부분 사업실시단계에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지의 타당성 등은 검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② 사전환경성 검토시의 구비서류를 구체화하는 한편 ③ 협의의 절차, 협의기간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였다.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추가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

〈표 1〉 환경정책기본법령상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행 정 계 획		행 정 계 획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국도이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한계농지지구의 지정	교통시설의 건설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공공철도의 건설·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도권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산업단지·유통단지의 조성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유통단지의 지정	하천의 이용·개발 및 해양개발	하천정비기본계획, 어항시설계획 중 기본계획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채석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의 지정, 가스사업실시계획	관광단지의 개발 및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등의 지정,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가·승인·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환경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경우와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관련법령에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농공단지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등 10개 행정계획과 총리훈령에서 배제되었던 민간인이 시행하는 보존용도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추가하였다.

10개 행정계획에는 마을정비구역의 지정(농어촌정비법), 광역시설계획(제주도개발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과 폐광지역 환경보존계획(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농공단지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소하천정비법), 온천개발계획(온천법), 체육시설설치사업계획(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수련지구조성계획(청소년기본법) 등이 해당된다.

보존용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조수보호지구, 자연보호지구, 습지보호지역, 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동주택 건설), 지하수보전구역 등에서는 사업계획면적이 5천m² 이상인 개발사업, 농림지역·

완충지역·자연환경지구·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광역상수도설치지역(공동주택 건설사업 외의 개발사업)·소하천구역 등에서는 사업계획면적이 7,500m² 이상인 개발사업, 준농림지역·공익임지·하천구역 등에서는 사업계획면적이 1만m² 이상인 개발사업, 공익임지 외 산림지역 등에서는 사업계획면적이 5만m² 이상인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공공사업뿐 아니라 소규모의 민간개발사업도 환경성 검토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말썽을 빚어온 바 있는, 한강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 등도 환경성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가 판가름나게 되었다.

환경에 영향 큰 사업은 구비서류 갖춰 협의·점검

관련 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계획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토이용계획이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같은 29개 행정계획은 협의를 요청할 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협의절차나 협의기간 등 구비서류 외의 사항은 당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어떤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이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성을 제대

〈표 2〉 구비서류의 종류

	내 용
공통구비서류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보호하여야 할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개별구비서류	•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관련법령에 사전협의 근거규정이 없는 '농공단지의 지정', '온천개발계획' 등 10개 행정계획과 총리훈령에서 배제되었던 민간인이 시행하는 보존용도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추가하였다.

로 검토할 수 있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관련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모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통구비서류와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개별구비서류로 구분된다.

개별구비서류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한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청하는 자 즉, 계획을 수립·확정하는 자 또는 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기간 내에 협의결과와 통보가 없는 경우에

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협의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행정계획의 추진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협의의견의 이행 상황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에 강화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지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미리 스크린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도의 정비·강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개발로 인한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이나 증가하는 오염원으로 인한 국토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의 폐해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국토환경은 '삼천리 금수강산'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최저임금제, 전사업장으로 확대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정현옥
노동부 임금정책과장

기 본적으로 시장경제하의 임금은 노동력 수급에 의한 노동시장의 가격조절기능과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교섭력이 없는 일부 취약계층의 개별근로자는 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이러한 저임계층의 임금 및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그로써 계층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임금 이상의 임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이며, 많은 현대국가가 이를 위하여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거나 또는 노사단체간에 협약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지니는 저임근로자 빈곤 방지, 계층간 임금 및 소득격차 해소,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 부작용 특히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퇴 및 그에 따른 고용감소효과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OECD에서는 94년 실업감소 및 고용증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 방향(Jobs

Strategy)을 발표할 당시 유럽대륙국가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최저임금에 주목하고 그 고용감소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향후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OECD의 고용전략이 단순히 일자리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용의 질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최근에는 다시금 최저임금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만 않는다면, 저임계층의 임금 소득 향상과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88년 1월 1일 이래 매년 새로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법정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이 제도를 일시에 전산업에 적용할 경우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도입 첫해인 88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듬해인 89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

최저임금제는 저임계층의 임금
및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함으로써 고용의 질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의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가
4인 이하의 전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최저임금제 수혜 근로자의 수는
14만1천여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조업·광업·건설업으로 확대하는 등 적용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여서는 최저임금제 본래의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위생·서비스 업종이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당초 계획하였던 91년보다 1년 앞당겨 90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전산업에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89년 7월 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적용대상을 제한할 경우 임금수준이 낮아 최저임금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은 영세소규모사업체 근로자를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99

년 3월 1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9년 9월 1일부터 최저임금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올해에는 전체 사업장까지 확대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인데, 8월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 장애인·직업훈련생 및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매년 결정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동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의거하여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며,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

〈표 1〉 최저임금의 산정기준 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등)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명시 또는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기타 직무·직책수당, 물가·조정수당, 기술·면허·특수작업수당 등

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되, 시간급을 반드시 환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같다. 즉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일수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16.6% 인상된 42만1,490원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척 복잡하고 어려웠다.

작년말부터 정부의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이 구상되었고, 연초에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의 주요한 항목으로서 최저임금제의 적용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수준 현실화가 공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에는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 월환산액 36만1,600원으로서 전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32.5%, 영향률(적용대상근로자 중 수혜대상자의 비율) 1.1%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표 2〉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단위 : 원, %)

	최저임금 (시간급)	영향률	인상률	통상임금인상률 (전산업 평균)	임금총액인상률 (전산업 평균)
1988	487.5	4.2	-	14.2	15.5
1989	600	10.7	23.7	18.6	21.1
1990	690	4.3	15.0	18.4	18.8
1991	820	8.6	18.8	17.6	17.5
1992	925	8.5	12.8	14.3	15.2
1993	1,005	4.5	8.6	12.3	12.2
1994.1~1994.8	1,085	2.1	8.0	-	-
1994.9~1995.8	1,170	2.1	7.8	11.4	12.7
1995.9~1996.8	1,275	1.9	9.0	10.9	11.2
1996.9~1997.8	1,400	2.4	9.8	11.7	11.9
1997.9~1998.8	1,485	2.3	6.1	9.4	7.0
1998.9~1999.8	1,525	0.4	2.7	3.7	-2.5
1999.9~2000.8	1,600	1.1	4.9	6.1	12.1

주 : 통상임금(정액급여) 및 임금총액 인상률은 각각의 당해연도 평균액을 전년도와 대비한 것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을 전년도 최저임금보다 16.6% 인상된 42만1,490원으로 의결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9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수준으로서, 수혜자는 약 9만8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도 1.8%로 상당폭 증가된다.

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내외로부터 받아 온 사실이 배경이 된 것이다. 실제로 92년 이래 최저임금의 연도별 인상률은 전체근로자의 통상임금인상률을 매년 하회함으로써 전체근로자 통상임금과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 왔다.

3월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노·사·공익 각 9인씩으로 총 27명, 임기 3년) 대부분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 위촉할 당시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도 3인 임명됨으로써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노동계의 열기는 이미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4월초부터 시작된 3회의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4회의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거치면서 경영계는 5.4%의 인상률을 제시한 반면에 노동계(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는 한 목소리로 69.1%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후 민주노총은 중도 불참을 선언하였고, 여타 최저임금심의위원들은 조사연구된 생계비·노동생산성·유사근로자 임금 등 준거지표를 토대로 9회에 걸친 전체회의를 통하여 오랜 논란과 토의를 벌였다. 공익위원들은 공식·비공식의 중재를 통하여 노·사 단체 제시안간의 간격을 좁히려고 집요한 노력을 펼친 결과, 7월 21일 최종 결정일 당일 간격은 크게 좁혀졌으나, 끝내 전원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전년도

최저임금(시급 1,600원, 월환산액 36만1,600원)보다 16.6% 인상된 시급 1,865원(월환산액 42만1,490원)을 새로운 최저임금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91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수준이며, 수혜자는 약 9만8천명으로 추정되어 영향률(1.8%)도 상당폭 증가된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면 수혜자는 약 14만1천명(영향률 2.1%)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시급 1,865원, 일급 1만4,920원)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견접수 및 검토 결과 원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기로 하고 2000년 8월 5일자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2000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개별사업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 8~9월중에 최저임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올 10~11월 동안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기간 설정, 최저임금 이행실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행지도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또는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장, 섬유·봉제·고무·음식점업 등 저임금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최저임금 이행여부도 수시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

IMT-2000 사업자 선정



이기주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

세 계 통신시장의 환경은 이동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유선 통신서비스에서 무선통신서비스로,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라 음성서비스에서 데이터서비스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동성'에 '인터넷'을 결합시킨 IMT-2000

IMT-2000은 '이동성'에 '인터넷'을 결합시킨 서비스로서 인터넷·전자상거래·영상전화 등을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이다. IMT-2000은 ITU의 IMT-2000 표준을 적용하여 2000년경 제공되는 국제 이동통신서비스(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를 의미하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동전화 등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고속화되고, 서비스가 고도화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라 할 수 있다.

IMT-2000은 첫째, 인터넷·영상 등 고속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둘째, 표준화 및 동일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글로벌 로밍을 지향하며 셋째, 첨단 음성압축·복원기술을 사용하여 음성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IMT-2000은 음성단말기, 노트북에 연결된 무선 데이터 터미널, 저·고속 데이터단말기, 영상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IMT-2000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이용자의 수요변화가 빚어낼 미래의 핵심 통신서비스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켜 정보통신산업의 혁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중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1년 내지 2002년에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 아래 IMT-2000 정책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크게 증대될 세계 무선통신 서비스와 장비시장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단말기 시장에 진출하여 주요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IMT-2000 도입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99년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 정보통신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2000년 7월 12일 '2GHz 주파수대

지난 7월 12일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성과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을 발표하였다.

금년말 IMT-2000 사업자 선정 마무리

정부는 IMT-2000 사업자 선정을 통해 첫째,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화사회와 디지털경제로의 이진을 촉진하고 둘째, 우리 국민 모두가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며 셋째,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 모두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다는 데 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통신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은 복수표준 채택하고
3개 사업자 선정

IMT-2000 사업자 수는 경쟁을 촉진하면서, 사업성이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정하고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많은 통신서비스업체와 정보통신기기 및 콘텐츠 등 관련 기업 등의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자 허가심사시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사업자 준비 동향을 보면, 현재 4개 사업자 그룹군으로 나뉘어 자금력·기술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사업진출을 준비 중이다.

한국통신그룹(한국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파워텔 등)은 IMT-2000 사업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한솔M.com의 지분인수를 발표하였다. SK텔레콤은 IMT-2000 기술개발에 1,233억원을 투입할 것을 발표하고 신세기통신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NTT DoCoMo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LG그룹은 LG텔레콤과 데이콤이 공동

〈표 1〉 이동통신의 기술발전 추세

	아날로그 (1 세대)	디 지 털		
		2 세대	~	3 세대
무선접속 방식	FDMA	TDMA/CDMA	TDMA	CDMA
전송속도(bps)	-	9.6k, 14.4k	115k	144k, 384k, 2M
주파수대역폭(Hz)	30k	30k, 200k, 1.25M	30k, 200k	1.25M, 5M
서비스 유형	음성	음성, 저속데이터	음성, 중속데이터	음성, 고속데이터 영상
서비스 지역	국내	국내, 제한적 국제 로밍	국내, 제한적 국제 로밍	단계적 글로벌 로밍

주 : 전송속도는 기술개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으로 IMT-2000 사업추진단을 발족하였다. 또한 하나로통신·온세통신·10개 무선호출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 IMT-2000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에릭슨과 IMT-2000 기술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사업자 선정은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인데, 출연금의 상한(1조3천억원)과 하한(1조원)을 도입하여, 출연금 제시액이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따라 일정점수(최고 2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신청법인의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같거나 적을 때에는 상·하한액의 평균액(1조

1,500억원) 이상을 제시토록 하고, 하한액 또는 평균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신청업체간 하한액으로 담합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출연금은 구성주주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자본이득 일부를 회수하고, 출연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쟁력이 악화되거나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간, 국민 개개인간 정보 평등의 원칙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은 복수표준(동기식, 비동기식)을 채택하여 업체가 자율로 결정토록 할 계획인데, 복

〈표 2〉 주요국의 IMT-2000 사업자 선정 동향

국 가	사업자허가시기 (서비스개시시기)	사업자 수	사업자 선정방법	기술표준	진입비용 (사업자당)	기존이동전화 사업자수	선정결과
미 국	사업자에 일임	일부 : 97년경매 추가 : 검토중	경매제	복수 (동기, 비동기)	경매대금	· 전국사업 자 없음 · 주요 도시 6개 사업 자 제공중	이동전화 사업자
프랑스	2001.1/4 (2002년)	4개	사업계획서 심사	복수	21조원 (5.2조원)	3 (전국)	—
독 일	2000.중반기 (2002년)	4~6개	경매제	복수	61조원 (예상)	4 (전국)	—
네덜란드	2000.하반기 (2002년)	5개	경매제	복수	9.4조원 (예상)	5 (전국)	—
일 본	2000.6.30 (2001년중)	3개	사업계획서 심사	복수 (동기, 비동기)	없음	· 전국 : 1 · 지역 : 5 ※ 지역별 3~4개 사업자	기존 1사 및 기존 이동 사업자 중심의 2개 사업자
영 국	2000.4.27 선정 (2002년)	5개	경매제	복수 (비동기)	39조원 (7.8조원)	4 (전국)	기존 4사 신규 1사
핀란드	99.3.18 선정 (2002년)	4개	사업계획서 심사	복수 (비동기)	없음	· 전국 : 3 · 지역 : 1	기존 3사 신규 1사
스페인	2000.3.13 선정 (2002년)	4개	사업계획서 심사	복수 (비동기)	5,160억원 (1,290억원)	3 (전국)	기존 3사 신규 1사

IMT-2000사업은 2002~2010년의 기간 동안 직·간접 생산 유발효과 약 3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1조원, 고용창출효과 약 42만명 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생산과 고용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 및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켜 우리 각 분야의 생활도 질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요준을 채택하게 되면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글로벌 로밍이 가능하여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IMT-2000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당 1조 3천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배분하는 경우 주파수대가를 출연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출연금은 정보화촉진 기금으로 전입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전파자원의 희소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이용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주주 등 자본 참여자가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대가는 적정수준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T-2000 주파수대역에 대한 주파수대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우선, 주파수 이용기간을 15년으로 하여, 15년간 예상 매출액의 3%(중전 PCS의 경우 5년간 매출액의 7%)를 적용한 결과, 사업자당 1조 3천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심사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프랑스의 주파수대가를 우리나라의 인구·GDP·주파수폭·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여 상한액을 1조 3천억원으로 하고, 상한액의 약 75%인 1조원을 하한액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정보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 기술개발 등 법률에 규정된 대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미래에 대한 투자에 국한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출연금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분할납부의 경우 2분의 1은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납부(이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MT-2000 사업초기부터 기지국 공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2~3세대간 로밍을 통해 전 국민이 사업자 선택에 관계없이 이동전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선정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이용자 불만 처리절차 등 이용자 보호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IMT-2000 사업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내에 '심사기준 개선방안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 관련업계·시민

〈표 3〉 국내 IMT-2000 장비시장 전망

(단위 :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시스템	16,727	20,603	19,393	16,808	7,172
단말기	6,897	16,566	20,592	26,796	17,281

주 : 시장규모는 내수시장 기준임

자료 : ETRI,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2000. 5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항목을 간소화, 객관화하는 등 현행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기준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보완된 심사기준은 지난 7월 12일 발표한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을 바탕으로 소비자후생 증대, 통신서비스 경쟁력 향상, 중복·과잉투자 방지, 고용창출 도모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용자 보호계획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심사항목들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3단계로 되어 있던 심사항목을 2단계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심사시 고려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심사기준을 객관화하였으며, 계량평가 점수를 5점에서 17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개선된 심사기준에 일치되게 사업계획서를 기술하도록 사업계획서 세부작성지침과 양식을 보완하고, 허가신청서류 접수에서 허가서 교부에 이르기까지의 허가심사 과정과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2002~2010년 기간 동안 생산유발효과 약 38조원

IMT-2000은 정보통신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제조업,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생산·고용 등 국민경제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결과(2000. 6)에 따르면, 2002~2010년 기간 동안 IMT-2000사업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는 약 3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1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42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구조의 비중을 고정망(fixed network)에서 이동망(mobile network)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변화시켜 유·무선 통신서비스간 경쟁·대체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MT-2000의 상용화에 따라 단말기, 장비 및 관련부품(애플과 듀플

렉서, 필터, 안테나, RF스위치 등 기지국 및 중계기용 RF부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하여 장비제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MT-2000의 도입으로 인터넷서비스의 영역이 무선으로 확장되고, 이동 전자상거래(mobile commerce)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 시장의 규모와 성장속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IMT-2000은 인터넷의 확산 촉진, 응용 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와 사회전체의 생활행태가 변화하고, 개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개인간 음성통화가 대부분이었던 2세대와 달리 IMT-2000에서는 '개인 對 개인(Person-to-Person)' '개인 對 기기(Person-to-Machine)' '기기 對 개인(Machine-to-Person)' '기기 對 기기(Machine-to-Machine)' 등 다양한 통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장·여행·쇼핑·오락·교육·의료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생활이 질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9월말까지 IMT-2000 사업자 허가신청 접수를 받아 금년말에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심사는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판단하에 엄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심사항목·평가방법·배점 등 모든 심사기준과 심사결과까지도 공개함으로써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IMT-2000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위한 한전 민영화



문재도

산업자원부 시장조성팀장

전 력산업 구조개편은 99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5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노동·공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들어 2단계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이라 할 한전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말 개혁입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완료되어 구조개편이 착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외환위기를 벗어난 현 상황에서도 한전의 구조개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효율성·투명성·재무구조 건전성 제고

한국전력은 자산 규모가 64조원을 상회하는 우리나라 최대 독점공기업으로 수 차례에 걸쳐 사업부제와 같은 내

부조직 혁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첫째, 한전은 2000년 예산이 26조8천억원으로 정부예산의 29%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기업 규모가 확대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비효율(X-inefficiency)이 나타나고 있다. 發電 분야의 경우 90년대 들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투자결정의 합리성 결여로 전력설비의 과·부족 현상이 반복되는 등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둘째, 관련분야 다각화 과정에서 투명성 미흡 등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셋째, 한전은 매년 7~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정부투자기관이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증자 없이(필자 주 : 지난해와 같은 활황 증시 장세에서도 한전은 한푼도 직접 조달을 하지 못하였음) 대외차입에만 의존해야 했으며, 특히 외채 규모가 96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외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앞으로도 매년 300~400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자금 조달 구조가 지속된다면 한전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대외 충격에 취약해져 장기 전력수급 안정 및 국민경제

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GDP 대비 전력소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30% 이상 높은 전력다소비형 경제구조이며, 최근 들어서 전력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상회하고 있어 이러한 불안한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우려마저 있다. 이제는 단순히 소비절약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가격기능을 통한 전력소비의 합리화 추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매년 6% 이상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기능을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단순한 한전 내부의 경영합리화가 아닌 근본적인 산업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발전부문 민영화 → 배전·판매 부문 민영화 → 완전경쟁 단계로 이행

지난 94년 한전의 경영진단 결과는 우리의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전력산업을 우선 경쟁체제로 전환한 후 민영화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그후 전문가팀의 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99년 1월 비로소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구조개편 기본계획은, 우선 한전이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 전분야를 수행하는 독점체제에서 경쟁이 효율적인 발전·배전·판매 부문을 여러 개의 기업으로 분할한 후 민영화하는 경쟁적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전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경쟁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가 공정한 시장감시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영국·호주·미국·태국·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이 추진중인 구조개편 내용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구조개편 추진전략상 산업구조의 경쟁체제로

우리나라 최대의 독점공기업인 韓電은 심각한 내부 비효율, 96억달러를 상회하는 외채규모, 투자결정의 합리성 결여로 인한 전력설비의 과부족 현상 반복 등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구축과 가격기능을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 전환과 민영화를 일시에 추진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유럽과 같이 국가간 전기의 융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력소비가 아직도 급증하고 있으며, 종별 전기요금간 격차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구조개편의 방향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문부터 착수하여, 유통단계(배전, 판매)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산업 및 소비자의 경쟁체제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로 전기원가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규모의 경제를 상실한 발전부문을 6개회사로 분할·민영화하며, 이때 발전회사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이 현재처럼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발전회사 및 한전으로부터 분리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전력거래와 계통운동을 담당하게 된다.

2단계는 배전과 판매부문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하되, 한전은 송전사업만을 담당하고 소비자는 지역배전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대소비자의 경우는 지역배전회사를 통하지 않고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의 직접구매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3단계는 일반소비자도 전기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 경쟁단계(도·소매 경쟁)로 이행하는 것이다.

공급위주 정책에서 시장중심체제로

그간 정부는 입법 및 홍보과정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왔다. 이들은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였다.

첫째, 구조개편 과정에 대한 것으로 주로 민영화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정부는 다양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민영화 방법을 결정기로 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한전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구조개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구조개편 결과에 대한 것으로 주로 가격 인상이나 수급차질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에 신규참입을 허용하는 등 경쟁이 최대한 촉진되도록 하고, 강력한 시장 감시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전기가 필수재이며 전기요금이 경제적 측면에서 왜곡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과 가격이 안정되도록 타산업에는 없는 별도의 시장보완대책을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우려와 정부가 추진할 구체적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민영화 방안 수립

발전회사 민영화가 한전 구조개편의 최대 관심사가 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민영화연구기획팀’을 구성하고 급년 5월까지 연구를 통해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민영화와 관련된 논란은 해외기업에 매각시 국부유출 우려, 국내기업에 매각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였다.

기획팀이 제시한 민영화방안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력발전회사 5개사 중 1개사를 우선 매각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4개사를 매각’하는 점진적 방법으로 추진한다.

둘째, 우선 매각 1개사는 주식매각 방식으로 추진하여 다수 국민과 종업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초기 공모물량의 20%를 우리사주로 종업원에 우선 배정한다.

셋째, 대기업 참여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제한한다.

넷째, 외국인 참여는 전체설비의 30%(발전회사 2개 규모) 이내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한전 직원의 고용승계, 이적보상 등 현안은 노사합의를 통해 해결토록 한다.

정부는 기획팀의 건의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정부방침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차입금의 연대보증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조속히 민영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당분간 소비자요금 인가제 유지하여 전기요금 안정적으로 관리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적정 투자보수율에 미달하고, 용도별로 수준을 달리하는 종별 차등 요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구조개편 이후에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요금이 낮은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전기요금도 궁극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경제원리상 타당하나, 현상황에서 자유화시 위에 제기한 바와 같이 요금의 급변에 따른 국민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소비자요금 인가제를 유지하여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전의 경영합리화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부문에서 유효성 있는 경쟁이 촉진

되도록 전기위원회의 시장감시기능을 법제화하였으며, 현재의 중별 정책요금체계는 단계적으로 원가구조에 부응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요금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KDI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견은 '구조개편 때문'이 아니라,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구조개편과는 별개로 검토될 사항으로 여겨진다.

신규참입 적극 허용하여 전력수급 차질방지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15년까지 현재 규모 수준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야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하여 발전소 건설을 기피하거나, 요금 수준이 적정 투자보수에 미달하여 민간투자가 위축될 경우에는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구조개편 이후 발전사업에 대한 신규참입이 적극 허용될 것이며 발전소 투자는 시장기능에 의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전력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새로운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하여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구조개편 초창기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2006년까지 준공 예정인 발전소를 각 발전회사에 배분하여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가격인상을 기하는 사업자간 담합행위를 근절해 나가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표와 같이 시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활발한 투자분위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개편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우선, 산업이 시장중심체제로 전환되어 경쟁과 민간자본의 활용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게 되며 그 결과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하락하고, 전기회사의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發電부문의 분할 · 민영화 단계,
배전과 판매 부문의 분할 · 민영화 단계,
완전경쟁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비자요금
인가제의 당분간 유지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규참입을 적극 허용하여 전력
수급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회사는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되기 전에도 대소비자와 고품질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직거래, 정전피해보상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전기공급시스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완전경쟁체제로 전환되면 한 창구에서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을 비롯한 모든 에너지를 취급하는 종합 에너지 판매회사가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며, 이럴 경우 소비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에너지산업도 역동성을 갖게 되며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촉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전력산업은 정부와 한전이 중심이 되어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으나 경제의 개방화 · 자율화 추세에 맞춰 전력산업도 타 산업과 같이 시장중심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정부는 전기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적 기능 수행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

심해저 광물자원 상용화 위한 기반 구축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지난 7월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우리나라 심해저 광물자원을 본격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하였다. 이것은 지난 80년대부터 준비하여 93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계획을 토대로 추진해 오던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태평양 공해상에 확보한 망간단괴가 주요 대상

심해저 광물자원이란 수심 2천~6천m 상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자원으로 망간단괴나 고코발트망간각, 해저열수광상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그 중에서 태평양 공해상에 우리나라가 확보한 망간단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망간단괴란 심해저에 널려 있는 직경 1~15cm의 망간덩어리로서 망간·니켈·코발트·구리 등을 함유하고 있다.

주요 금속광물의 수요는 세계 각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특

히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8년 우리 금속광물의 수입액은 65억달러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광물의 99% 이상을 수입해 쓰고 있는 것이다. 망간단괴에 함유되어 있는 4대 금속광물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은 83년부터 시작되었다. 83년 3월 유엔 해양법협약에 서명한 이래 당시 동자부와 과기처에서 「심해저 광물자원탐사 기본계획」을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하고 91년까지 과기처의 R&D 사업으로 하와이 동남방 C-C(Clarion-Clipperton) 지역 탐사를 실시하였다. 동 탐사결과를 토대로 91년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심해저 광구등록계획과 동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유엔에 광구등록을 앞두고 93년 12월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의결, 광구등록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3년 계획에서는 2003년까지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광구를 확정하고 그때까지의 사업시행 결과와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2004년 이후의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는 94년에 세계 일곱번째로 태평양 C-C해역에 15만 km²의 광구를 등록하였다.

선발투자국들, 정밀탐사를 거쳐 핵심기술개발 완료

현재까지 광구를 등록한 나라는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동구권 컨소시엄,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등 7개국이고 그 이전에 민간기업들이 탐사하여 권리를 인정받은 국제 민간 컨소시엄이 4개가 있다. 광구를 등록한 이후 우리나라는 우리가 등록한 광구에 대해서 정밀탐사를 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15만km² 중 4만5천km²를 반납했고 2002년까지 3만km²를 추가로 반납할 계획이다(필자 주 : 유엔에서는 광구등록 이후 8년 이내에 15만km² 중 절반을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경제성 있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탐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정밀탐사는 동력자원부와 산업자원부를 거쳐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으며, 심해저 망간단괴를 채광하고 제련할 수 있는 기술은 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해 왔다.

먼저 선진국들을 포함한 국제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번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대하여 선진국들은 관망자세인데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지난 70년대부터 심해저 광물자원에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을 해 왔다. 국제 민간 컨소시엄이 유엔 해양법협약이 태동되기 이전부터 태평양에서 자원탐사를

정부는 미래 광물자원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 해양광물자원의 자주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 상업생산체제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사업추진체제 확립, 채광우선 지역 확정, 자원개발 다원화, 기반기술 확보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실시해 온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 같은 국제 민간 컨소시엄과 일본·프랑스 등 선발 투자국들은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정밀탐사를 거쳐 개발우선지역을 선정하고 핵심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즉, 경제성만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설을 하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 등 후발투자국들도 우리보다 3~5년 정도 기술개발이 앞서 있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선진국을 포함하여 심해저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은 아직 상업생산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래 금속광물의 수요부족과 가격급등에 대비하여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표 1〉 금속광물 자급 및 수입 추세

(단위 : 백만달러, %)

	1989	1993	1995	1997
금속광물 자급률	5.51	2.70	1.77	0.77
총수입액 중 금속광물수입액 비중	2.75	2.50	3.67	6.08
4대 광물 수입액	1,611	1,634	3,060	2,932

주 : 금속광물 수입액에는 철강이 포함되지 않으며, 4대 광물은 망간단괴에 함유되어 있는 망간·니켈·코발트·구리를 말한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광구확보를 위한 탐사에 치중하여 투자를 해 왔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탐사분야는 정상 추진되어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채광·제련 기술개발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크고 후발투자국인 중국·인도 등과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 조선·제련 등 민간부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93년에 수립된 계획을 이번에 수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광물자원의 수급 불확실에 대비하여 해양광물자원의 자주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수출증가로 산업 원자재인 금속자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급등에서 보는 것처럼 자원보유국은 언제든지 보유자원의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인상이나 수급교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이 장기화·구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금 당장 경제성은 없지만 주요 전략 금속자원을 자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자원보유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경제장관화

의 의결에만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고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왔었다. 또한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탐사·채광·제련 등 분야별 사업추진 진도가 서로 맞지 않고 관련 부분간 기술 연계성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주체가 없이 정부 및 연구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 분석이 미흡하고 앞으로 투자가 확대되거나 상용화를 위한 개발에 대처하기 곤란했었다.

셋째, 사업진전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93년 수립한 추진계획은 광구확보를 위한 탐사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채광·제련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탐사와 기초기술 개발단계를 넘어서 실용기술 개발과 실험역 시험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한데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차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2010년까지 상업생산체제 기반 구축

이번에 수립한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는 2010년까지 상업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데 두고 있다. 이것은 2010년부터 바로 상업생산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2010년부터는 언제든지 상업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두겠다는 것이다. 즉, 2010년까지 우선 채광지역을 선정하여 5천분의 1 수준의 개발도면을 작성해 두고 실험역 실험 등 실용기술을 개발하며 상업생산을 위

<표 2> 당초 투자계획 및 현재까지의 투자실적(94~99년)

(단위 : 백만원)

	당초 투자계획	투자실적	연구기관 (주관부처)	기술수준 (선진국100)
탐 사	17,000	14,197	해양연 (해양수산부)	80
채광기술 개발	2,950	2,394	해양연, 자원연 (과학기술부)	40
제련기술 개발	750	937	자원연 (과학기술부)	65

한 설비를 설계해 두고 상업생산시기를 추정해 두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속광물자원의 가격이 급등하고 선진국들이 상업생산에 들어가면 우리도 조속히 상업생산 설비를 갖춰 그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자는 것이 기본목표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먼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해 오던 기술개발업무를 앞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맡아 함으로써 심해저 자원개발사업을 일원화하는 한편 '심해저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관련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업체 대표들로 구성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문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세부투자계획 수립, 국제협력 강화 등 사업초기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전담주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단계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바람

심해저 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단계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 제도정립과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10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실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약 15억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한 사업주체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것은 심해저 광물자원 외에도 다른 해양자원의 개발까지 촉진시키며 본격적인 기술개발 등 사업진전에 따라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 중점과제는, 채광우선지역을 확정하고 자원개발을 다변화한다는 것이다. 2002년까지 국제해저기구(ISA)에 반납할 지역(3만km²)을

〈표 3〉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 단계 (1994~2002년) 광구 확보	2단계 상용화개발 기반구축		3단계 (2010년 이후) 상업생산
		1 차 (2000~2004년)	2 차 (2005~2010년)	
주요 내용	• 광구등록 및 확정 (7만5천km²) • 탐사, 채광·제련 등 기초기술개발	• 사업수행주체 확립 및 관련법 정비 • 우선채광지역(4만 km²) 선정 • 채광·제련 등 기초기술개발	• 1 차 채광지역(2만 km²) 선정 및 개발도면 작성 • 실험역 실험 등 채광·제련 실용기술 개발 • 상업생산설비 설계 및 생산시기 결정	• 연간 300만톤 상업생산
정부와 민간 역할	정부 주도	정부 주도 및 민간참여 유도	정부와 민간 공동 참여	민간 주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광구로 확정된 7만5천km²(필자 주 : 이것은 남한 면적의 4분의 3이 넘는 면적이다) 중에서 우선 채광할 지역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우선채광지역은 최종 단독개발광구 중에서 1차로 4만km²를 선정한 뒤 그 중에서 1차 채광지역 2만km²를 선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요소별 개발도면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우선지역 선정은 탐사 예정 해역에 대한 환경특성을 규명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해 탐사하면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남서태평양의 망간각(필자 주 : 해양부존 주요금속들이 해저산에 침전되어 형성된 광물자원으로서 망간·코발트·니켈백금·티타늄 등을 함유), 해저열수광상(필자 주 : 해저 마그마로부터 방출된 熱水가 지하투으로 상승·침전된 광물자원으로서 금·은·납·아연 등을 함유) 탐사 등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셜군도·피지·마이크로네시아 등 남서태평양 도서 국가는 광대한 EEZ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EEZ 내에는 무궁한 자원이 부존되어 있어 선진 각국들은 이의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도 우선 남서태평양에 대한 광역 탐사를 실시하여 망간각 및 해저열수광상의 개발 유망지역을 선정한 뒤, 독점적 탐사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5월에 그 전초기지로서 마이크로네시아에 '한·남태평양 해양과학연구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셋째는, 상용화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먼저, 연간 300만t의 심해저 망간단괴를 채광할 수 있는 채광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근해역 성능시험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초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토대로 실험역 성능시험을 통해 상업생산용 채광시스템 모델을 확정하는 등 실용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광한 망간단괴를 제련할 수 있도록 최적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소규모 시험제련시설 운영을 통해 세부공정을 확

립한 뒤 상용화 공장을 설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제 공동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해저 자원개발 등 해양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국가간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연간 약 15억달러의 수입대체효과 기대

심해저 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즉, 1단계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제도정립과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2010년까지의 2단계에는 실험역 실험 등 실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상호부품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균형 잡히고 차질없는 기술을 개발하며 국제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총 투자예산은 1,175억원이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약 300만t의 망간단괴를 생산함으로써 망간과 코발트는 완전히 자급하고, 니켈은 국내수요의 3분의 2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5억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조선·중공업·제련산업과 전자·로봇·통신·소재 분야 등 관련산업에도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은 국제적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어 지연되고 있을 뿐이며, 시간이 흘러 육상광물자원이 고갈되고 금속가격이 상승하면 언제라도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대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빈 외양간을 고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여형구
건설교통부 신공항계획과장

인 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기본목표는 2000년대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동북아지역 중추(Hub)공항으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다.

이 목표는 92년 5월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그간 4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도 변함이 없었으며 다만 항공환경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 또는 보완되었을 뿐이다.

공항의 Hub화는 단기적 목표가 아니며 제반 항공산업시장의 여건성숙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육성·발전되는 것으로서 해당국가의 항공정책이나 공항시설 및 운영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공항의 지리적 여건, 항공노선의 경쟁력, 공항마케팅, 항공정책, 타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등에 따라 그 가능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공항입지 및 시설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 갖춰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항입지 및 시설 측면에서 Hub 공항으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운영상의 제반요건만 갖추고 이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해 나간다면 장래 동북아지역 Hub 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Hub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기·종점 수요가 확보되어야 하며 대륙간 운항노선에서 중간기착 없이 운항 가능한 위치로서 가능한 최전방(entry point)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계노선이 직항노선과 비교하여 화폐비용·시간비용·편의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항사용료, 부대서비스 요율, 환승시설의 편의 등 항공사 및 연계수요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정책과 함께 개방적 항공정책을 바탕으로 항공사와 연계된 운항수요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항공사가 해당 공항을 거점으로 연계 운항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하고 첨단공항시설의 확보와 함께 공항기능의 유연성과 공항시설의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24시간 운영체계가 가능하며 항공기간 연계 못지 않게 버스·철도·해운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또한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타 공항들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선 입지조건에 있어 반경 1천km, 비행거리 3.5시간 내 인구 100만명 이

인천국제공항은 대외적 입지면에서 반경 1천km내에 인구 100만의 도시 43개, 북태평양 항공노선 및 시베리아 횡단노선의 최전방에 있고, 대내적으로 국내선 수요의 90%를 차지하는 2천만 인구 규모의 수도권 배후도시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대형·첨단의 활주로 및 터미널을 갖춰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상의 도시 43개(인구 10억명)가 위치한 동북아 역내 항공망의 중앙부에 있으며 북태평양 항공노선(동북미-북미) 및 시베리아 횡단노선(동북아-유럽)의 최전방에 있어 주변국가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제선 수요의 90%를 차지하는 인구 2천만명 규모의 수도권 배후도시가 있으며, 활주로 양단으로부터 10km 이상이 바다로서 소음 피해가 없고, 개항초 355만평(최종 1,700만평)의 공항부지에 60대(153대)의 항공기 동시주기, 3,750~4천m급 장대형 평행 활주로 2개(4~5개)로 초대형 항공기나 초고속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6,400여명(2만명)의 여객처리와 1만개(3만개)의 수하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수하물처리시스템 등을 갖춘 15만4천평(26만5천평) 규모의 여객터미널 등의 공항시설을 갖추으로써 공항의 안전성·신속성·편리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표 1〉 양대 항공노선의 항공수요 예측

(단위 : 만명)

	1995	2010
북태평양 항공노선	1,200	3,300
시베리아 횡단노선	850	2,500

주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97년

24시간 운영체제 및 저렴한 사용료 등으로 경쟁력 증대

아울러 개항초기 5만3천평(최종 24만7천평)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확보하여 국제환적화물의 중계기지화할 계획이며, 공항내 상업·물류유통·첨단산업·비즈니스·숙박·주거기능 등을 구비하고 5만평(45만평) 규모의 국제업무지역, 66만평(264만평)의 배후지원단지 및 접근고속도로를 확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최첨단 운항시설도 주요한 경쟁력의 하나다. 1단계 개항시 CAT-Ⅲa, 시계 200m 미만에서도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운항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운항시설은 인천공항의 결항률을 0.48%이하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는 1998년 김포공항의 결항률 2.48%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경제적 우위성으로서, 일본 간사이, 홍콩 첵랍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비와 공항 이용료, 체크인 카운터 등 이용자 편의 우선의 공항 시설 배정과 함께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45분내(2002년 30분 이내)에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여유 있는 시설과 24시간 운영체제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은 고객인 항공사들에 주요시간대에 여유 있는 공간(SLOT)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하루 1,500여회의 이착륙에 견딜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된 활주로 시설 또한 인천공항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다.

일본 간사이 공항 등 주변공항과 비해 항공사들에게 부과할 저렴한 사용료도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취항예정 항공사들과 착륙료를 비롯한 각종 공항사용료에 대해 협의중에 있지만 경쟁공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사업비가 민자를 포함, 약 7조8천억원인데 비해 일본 간사이는 약 30조원, 홍콩 첵랍콕은 약 24조원에 달했다. 저렴한 사용료는 저렴한 공사비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료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인도·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 시장의 노선망 신·증설과 동북아 항공블럭 형성 추진, 영공자유화 정책(Open Sky Policy)에 따른 노선 및 운항횟수 확대와 동남아 자유수송 확대 등으로 Hub 공항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전개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항공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효율적인 공항 관리·운영을 통해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훌륭한 입지조건과 첨단시설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이 진정한 Hub공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항운영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관리운영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공항운영 Hub화 촉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항공정책적 측면에서 일부 국내선 환승을 포함한 국제선 전용의 인천국제공항과 국내선 전용의 김포공항간에 원활한 연계수송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효율적인 복수공항운영체계(Multi-Airport Operation System)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포공항에 도심공항 터미널 기능 등을 확보하고 전용리무진 셔틀버스와 일반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투입하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를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둘째, 국제 항공협정을 통한 다양한 노선확보와 취약 항공노선의 개척 등으로 항공시장을 다변화하고 국제노선의 개발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취항 항공사 중 수요격감 및 항공사 경영난 등으로 취항 중단된 외국항공사는 총 15개사로 이들 항공사의 복항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현재 취항중인 35개 항공사에서 개항초 45개 항공사 이상을 유치하고 환승수요를 25~30%이상 확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역내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하여 항공사 유치, 해외PR,

상업시설 판촉, 對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 마케팅 등 6대 마케팅 핵심과제를 정하고 항공사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영공자유화 정책을 통한 해외 취항지점 및 운항회수 증대, 선진 외국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 기회 확보와 함께 거점 항공사의 육성, 공항시설의 확보, 노선의 다변화 등 정부차원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24시간 편리하고 쾌적한 공항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점, 면세점, 비즈니스 센터, 항공사 라운지 등 공항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개항 초기 항공기 여객·승무원 약 3만여명에 달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와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항내 호텔 2동과 터미널내 환승객을 위한 호텔을 확보하고 배후지원단지내 약 2천여 가구의 주거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인천공항간 일반 노선버스, 리무진 버스, 뱅크 택시의 도입 등을 통한 대중교통체계구축과 상주 기관 및 업체별 자체 출·퇴근 버스의 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심 야시간대 연장 운행방안도 강구중에 있다.

이와 함께 24시간 중단없는 항공기 운항체계도 구축하기 위해 공항감시 레이더, 관제통신시설 등 첨단 항행안전시설을 보유하고 초정밀계기 착륙시설과 기상시설의 설치로 공항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국가 공역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루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공역 환경조성으로 항공사가 선호하는 공항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교통의 수도권 집중, 협소한 수도권 공역과 접근 관제구역에 따른 공중지연 및 운항시간 증대 가능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경제적 운항이 가능한 공중교통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인천공항의 효율적 공역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항건설 및 운영측면에서 합리적인 공항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항공협정을 통한 다양한 노선확보와 취약 노선의 개척, 24시간 편리하고 쾌적한 공항운영과 국가 공역 운영체계의 구축, 공항건설 및 운영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공항사용료 부과, 터미널 편의시설 확보와 공항수입의 극대화 도모, 공항과 도심까지의 편리한 접근교통시설의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항 운영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보다 상업성을 고려한 합리적 요금체계를 수립하고 환승 비행편에 대한 사용료 할인 또는 타 공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의 사용료 책정으로 환승객 수요를 확충하는 것이다.

금년 하반기중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상을 완료하여 적정 사용료 수준을 확보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 항공사 사용료를 고시할 예정이다.

사용료는 항공사에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서 B747-400기가 1회 이착륙시 사용료는 김포가 346만7천원인데 비해 일본 간사이공항이 3.8배인 1,327만1천원, 홍콩 첵랍콕 공항이 2.3배인 732만원(영공통과료 제외)이나,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투자비 회수측면과 주변공항과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여섯째, 편의시설 확보와 공항운영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공항이용객과 기업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업무지역, 주변지역 개발 등 여건 확보와 운항편수 증대와 편리하고 다양한 공항시설 및 부대시설의 제공으로 연계승객의 공항선택을 유인할 계획이다.

일곱째, 도심에서 공항까지 편리한 접근교통시설의 제공으로 연계승객의 확보 및 공항서비스 지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갖춘 인

천국제공항고속도로(40.2km 6~8차로, 방화대교~인천공항)를 국내 민자유치 1호 사업으로 건설 추진, 현재 공정률 98.8%로서 금년 11월 완공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연안부두·월미도·율도를 통한 해상접근체계도 정비·개선중에 있다. 또한 다양한 접근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 현재 민간사업신청자와 마무리 협상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여 2005년까지 김포공항, 2007년까지 서울역을 연결 개통토록 할 예정이다.

수원 이남 및 인천시 남단지역의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송도신도시-인천공항을 잇는 제 2연육교 건설사업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현재 영국의 AMEC사에서 제출한 민간제안서를 검토중에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2007년경 완공개통될 예정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 불과 7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92년 공사 착수한 이래 7월말 현재 96%의 공정으로 내년 3월 개항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면서 요즘도 건설관계자와 운영요원들은 완벽한 공사 마무리와 운영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함께 어떻게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자리매김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통한 선진 공항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공항관리 운영을 통해 공항운영의 Hub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이 명실공히 국가경제 경쟁력의 표본으로서 세계 유수공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주회사제도의 현황과 전망(Ⅱ)

주순식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1.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와 지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대기업집단의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었다.

첫째, 지주회사(자회사 제외)의 부채비율은 순자산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하였다. 부채에 의한 계열기업 확장은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금융기관의 기업경영 감시기능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제한이다. 미국이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감독규정에 의해 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50% 이내(소형지주회사의 경우는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 100%는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둘째,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최소 50%(99년 4월 1일 이전 주권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였다. 현재와 같이 낮은 지분율에 의해서 다수의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다. 외국의 경우 통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10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과도한 조건이 아니다. 또한 현재 재벌들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분율보다 높게 함으로써 비주력 사업부문의 자연스러운 매각을 유도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이 주력업종에 집중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련다각화를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다단계에 걸친 지배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고 손자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출자하는 순환식 상호출자(지주회사→자회사→손회사→지주회사)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탈법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다만, 사업회사(자회사)의 경영효율성을 위해서는 손자회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제조회사가 판매 혹은 A/S만을 전문으로 하는 손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여 1개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비

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금융기관이 산업재벌의 자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의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또한 동일한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사업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경우보다는 이를 분리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유리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97년에 지주회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일본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 관련된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토록 하였다. 사업부문의 분리·매각, 해외자본의 유치 등 지주회사를 활용한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해소되어 독립경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지주회사 규제현황을 살펴보자.

유럽·미국과 같은 나라는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수주주, 이사회, 채권금융기관, M&A시장 등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어서 지주회사로 인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전기·가스사업을 하는 소위 공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은행의 건전성 감독 및 공공서비스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일본은 종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를 금지하였으나 97년 6월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사업지배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였다.

과도한 사업지배력이 초래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 舊재벌형이다. 지주회사 그룹의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고, 다섯 이상의 사업분야에서 자산총액 3천억엔을 초

〈표〉 각국의 지주회사 비교

	미 국	일 본	독 일	한 국
규모제한	제한 없음	총자산 15조엔 이상이고 5 이상 사업분야에서 대규모 사업회사를 소유하는 경우는 금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회사 지분율	제한 없으나 통상 50~100%	50% 이상이면 자회사로 봄.	제한 없으나 50~100%	50% 이상 (상장 30%)
부채비율	은행지주회사는 50% 이내(타지주회사는 법적규제는 없으나 낮은 수준)	비규제	법적규제는 없으나 낮은 수준	100% 이내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	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 소유 금지	대규모 금융회사(자산 15조엔 초과) 및 대규모 사업회사(자산 3천억엔 초과)를 동시 소유하는 경우 금지	제한 없음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 금지

과하는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경우이다.

둘째, 금융과 산업의 결합형이다. 지주회사가 자산총액 15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와 자산총액 3천억원을 초과하는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이다.

셋째, 독과점형 지주회사이다. 5개 이상의 상호 대체·보완관계에 있는 사업분야에서 유력한 독과점회사(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상위 3위 이내에 드는 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이다. 다만, 위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기존회사가 사업부문을 지분을 100%의 자회사로 분리시키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순수분사화)에는 허용된다.

세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지원

지주회사와 관련된 조세문제는 설립시의 세 부담과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현물출자나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산·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물적분할에 의해 자회사를 신설하면서 자신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일정한 조건하에 새로 취득한 신설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이연해 준다. 또한 이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도 면제된다.

둘째, 지주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즉,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상장·등록법인 30%)를 초

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90%, 그 이하의 경우에는 60%를 익금불산입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차입과 다단계 출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와 자회사가 타법인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즉, 지주회사가 차입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text{지급이자} \times (\text{차입금} / \text{자산총액})]$ 의 금액만큼, 자회사가 타법인에 다시 출자하는 경우에는 $[\text{익금불산입 대상금액} (\text{해당 자회사 분}) \times (\text{당해 자회사의 타법인 주식가액} / \text{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의 금액만큼 익금불산입이 배제된다.

2. 국내 지주회사 설립 동향

최근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000년 6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6건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에스케이엔론(주), 씨엔앰커뮤니케이션(주), (유)케이아이지홀딩스, (주)SDN 등 4개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신고수리하였으며, 대한석소공업(주)와 (주)동서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중이다.

에스케이엔론(주)는 SK그룹이 미국 에너지회사 Enron과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 지주회사로서 30대 그룹으로서는 최초 사례이다. SK(주)가 도시가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6개 계열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미국 엔론사는 현금을 출자하여 50:50의 지분으로 99년 1월에 설립하였다. 동사는 설립 당시에는 지주비율이 36.3%로 일반회사였으나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이다. 동사는 99년말 기준으로 지주비율이 86.9%인 순수지주회사이며 부채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동건은 외자유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지주회사방식을 활용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유)케이아이지홀딩스는 미국 화학회사인 Air Product Manufacturing社가 전액 현금출자하여 설립(99년 12월)한 후 한국산업가스(주)의 주식 51%를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지주비율은 99.4%, 부채비율 55.4%의 순수지주회사이다. 동사는 산업용가스 제조업체인 자회사 1개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7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신고수리된 (주)SDN은 다른 3개 지주회사와 달리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이다. 동사는 당초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상장기업인 세종증권의 주식 39.14%, 세종기술투자의 주식 40%를 취득하게 되면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전환당시 지주비율은 68.8%, 부채비율은 92.7%였다.

최근 대기업들도 구조조정 추진과 소유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LG 그룹은 3년내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

3. 향후 전망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 설립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지주회사를 그룹내 유사업종 계열회사의 통합관리, 해외사업

의 총괄, M&A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GE, GM, IBM, P&G 등은 사업지주회사이고, Mobil은 순수지주회사이며, 독일의 30대 상장기업 중 Hoechst 등 12개가 지주회사이다. 다소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사업지주회사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데 비해 영국·독일 등은 순수지주회사가 더욱 발달된 점이다.

특히,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대 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금융자율화 추세에 따라 금융권별 업무영역 구별이 약화되면서 겸업화(Universal Banking)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있어서 지주회사 방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98년 금융빅뱅을 추진하면서 은행법,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증권·보험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금융현대화법을 제정, 종래의 은행지주회사 규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금융지주회사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양날의 칼과 같은 지주회사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작업과 지주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송재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 세기의 경제 환경은 신산업의 출현이 기업의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으며 세계는 국경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회담을 갖는 등 남북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제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인 여성과 여성경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여성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감수성과 섬세함 그리고 무한한 창의력과 강인한 추진력은 세계 어느 나라 여성보다도 우수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십분 발휘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접목시킴으로써 여성경제인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79년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내에 여성기업국(Office of Women's Business Ownership)을 설치하여 여성

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성기업 지원 기반 마련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사업체는 93만3천개로 전체사업체 수 278만6천개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37.4%를 고용하는 등 그 경제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사업자의 90.6%가 주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비제조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체가 4.3%에 불과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99년도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99년 추경예산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동년 11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99년 1월 6일 제199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2월 5일 법률 제5,818호로 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6월 11일 시행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기회의 균등보장,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여성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설치·운영 등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생산제품 구매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시 여성기업 우대, 여성의 창업촉진과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99년 7월 10일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현재 12개 지회와 9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여성경제인의 실질적인 권익신장과 활동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여성경제인의 구심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여성기업의 정확한 실태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99년 10월부터 11월말까지 종업원 5인 이상 여성기업 2천여개를 대상으로 경영일반, 공장소유, 구매 및 판매, 연구·기술개발, 수위탁거래, 고용 및 재무구조,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여성기업은 일반중소기업·대기업·벤처기업보다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시 현금을 선호하는 등 안정적인 내실 있는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기업은 정보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아직도 금융기관 이용시 '남편의 보증'을 요구받는 등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지원 강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창업수요가 많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수원)·경남(창원)의 7개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기존의 제조·벤처 창업 중심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비제조·서비스업의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 보육센터에는 2000년 6월말 현재 75개 업체가 입주(입주율 : 89%)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여성사업체 수

(단위 : 천개, 천명, %)

	전체사업자			여성사업자			여성비율		
	97년	98년	증감	97년	98년	증감	97년	98년	증감
사업체 수	2,854	2,786	-68	924	933	9	32.4	33.5	1.1
근로자 수	13,470	12,417	-1,053	4,951	4,645	-306	36.8	37.4	0.6

주 : 98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통계청)

또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125회 이상의 '여성창업강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9월~10월에는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 여성가장이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 점포임차금을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4%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여성 창업자와 기존 여성경제인간에 일대일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창업자의 성공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영컨설팅 및 경쟁력 향상 지원

먼저 여성기업의 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ISO, UL 등 해외유명 규격 인증을 획득하려는 여성기업 2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소요비용의 70%까지를 건당 최고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2000년 4월에는 '여성디자이너 패션대전'을 개최하여 총 11회의 현대의상·한복·악세서리 패션쇼 개최, 여성과 패션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유명 여성디자이너 패션 브랜드관 설치, 유명 여성디자이너 20인 선정, 유공자 시상 등 여성친화산업인 패션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105개 기업을 선정하여 1백만원 한도에서 경영진단 비용 전액과 4백만원 한도에서 경영지도 비용의 최고

80%까지 지원하고 있고, 여성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기업전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2000년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경제인이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 및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경영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 및 여성기업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개선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시 2~5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시에도 여성기업에게 3~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병역지정업체 추천 및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시에도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여성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생산제품 구매'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조달청·한국전력 등 69개 공공기관이 올해 약 7,800억원의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약 9천개 여성기업체의 업체명·주소·주요생산품목 등을 지역별·업종별로 수록한 여성기업 디렉토리를 발간·배포한 바 있

〈표 2〉 부채비율 비교

(단위 : %)

여성 기업	대 기업	중소 기업	벤처 기업
254	295	264	282

주 : 벤처기업, 대기업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98년)자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실태조사(99년)자료 인용

다. 또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부산에서 '여성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서울 ASEM관에서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창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와 여성기업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9월에는 광주에서도 여성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도 적극 지원하여 5월에 영국·스페인·벨기에 등 유럽지역에 '여성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고, 9월에는 일본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아직도 사회 일부에서는 여성기업에 대

한 우대지원을 '역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서비스업의 확대, 소비자욕구의 다양화·개성화 등 여성이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동안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우수한 여성인력을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경제발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늘리고, 각종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등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남성중심의 사회문화로 여성경제인이 겪는 보이지 않는 차별적 관행도 적극 시정해 나가는 등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전세금 동결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언뜻 보아서 전세금을 동결하면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비용이 줄어들어 서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동결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까지를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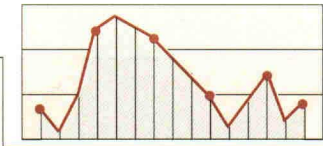
전세금을 동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주거비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감소와 함께 수요증가를 가져와 전세금이 오히려 동결하지 않는 경우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값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

해서는 전세금 동결이라는 '물리적 규제방식'보다는 주택임대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보장하여 충분한 임대주택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적 현상을 규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수요-공급의 경제원리에 의해 풀어야 한다.

◆ 출처 :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재정경제부·KDI 경제정보센터편



동남아 금융시장 불안

— 배경과 전망

권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동반하락하는 추세여서 외환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불안정과 개혁부진이 금융불안 요인

금년 2/4분기에 접어들면서 이상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한 동남아 국가들의 환율불안정은 政情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태국과 필리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7월 중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는 달러당 9,500루피아를 넘어섬으로써 연초대비 34%의 절하율을 기록하였고(<그림 1> 참조), 태국과 필리핀도 시장 불안요인이 확대되면서 7월말 현재 달러당 41.3바트와 44.9페소를 기록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동남아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국내적인 정치불안정과 개혁의 부진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개혁의 피로현상이 심각해지고 개혁조치의 모순과 갈등이 정치·사회적 긴장을 높이

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국불안으로 루피아화 가치 급락

평가절하율이 가장 큰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카르타 외환시장에서 루피아 환율이 연초 7,100루피아 수준에서 지난 3월 IMF의 자금중단 여파로 8천루피아까지 하락하고, 와히드 대통령의 잇따른 실정으로 정국불안정이 지속되면서 7월중에는 9,500루피아까지 환율이 치솟았다.

작년 10월 와히드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안정국면에 진입하였다고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던 것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에 불안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간부채 처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구체제 청산과 지방자치권 확대문제 등 제반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690억달러 규모의 민간기업의 대외채무 문제로 인해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민간기업들의 달러수요 급증은 루피아화 가치폭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요인이 거국내각의 정치적 갈등과 맞물리면서 지난 6월에는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가 대두되는 등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저하됨으로써 금융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수하르토 前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하르토 지지세력의 소행으로 보이는 검찰청사의 폭발물 사건, 지역분쟁의 재연과 와히드 대통령의 잇따른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루피아화 가치폭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개혁부진에 따라 경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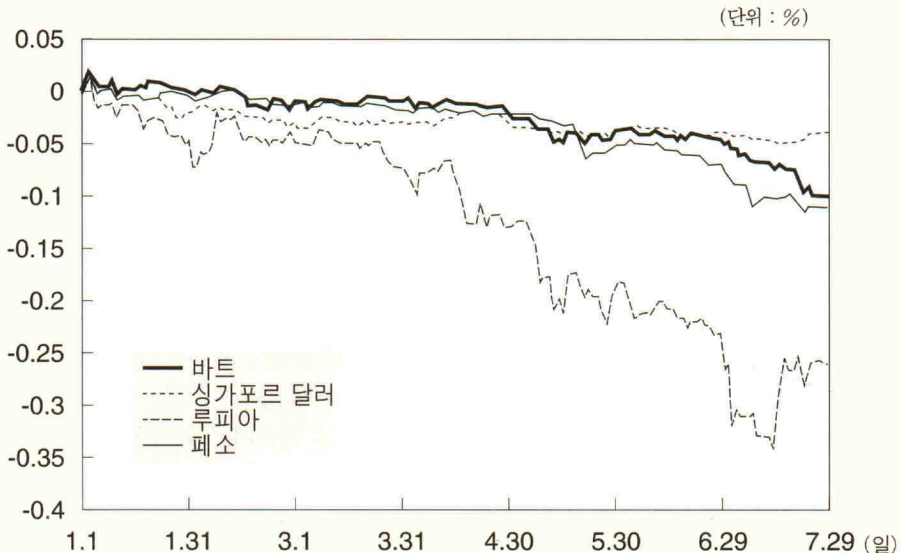
금년 상반기 이후 환율불안 양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남부 민다나오의 회교반군 세력의 폭동, 대통령이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실업자 증대 등으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와 더불어 페소화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억달

현재 동남아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국내적인 정치불안정과 개혁의 부진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개혁의 피로현상이 심각해지고 개혁조치의 모순과 갈등이 정치·사회적 긴장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러 규모의 구조조정융자 지원을 위해 IMF가 실시한 경제실사에서 당초 목표로 설정한 4~5% 경제성장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대미 환율은 44페소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3.4%에 그쳤고 2/4분기에는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IMF의 부정적인 전망 직후 필리핀 페소화는

〈그림 1〉 동남아 주요국의 평가절하율 추이(2000년)



자료 : Bloomberg

단기차익을 노리는 환투기에 의해 평가절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필리핀 중앙은행은 해외송금 등을 포함하여 연초부터 약 70억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 중앙은행 총재가 투기자본에 의해 필리핀 외환시장이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고 외자유출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현재 중앙은행은 45페소를 시장지선으로 설정하여 더 이상의 하락세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시장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 관계자들은 현재 필리핀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증권 및 은행법 시행, 중앙은행에 대한 은행감독권 부여 및 정치적 불간섭, 국영은행 민영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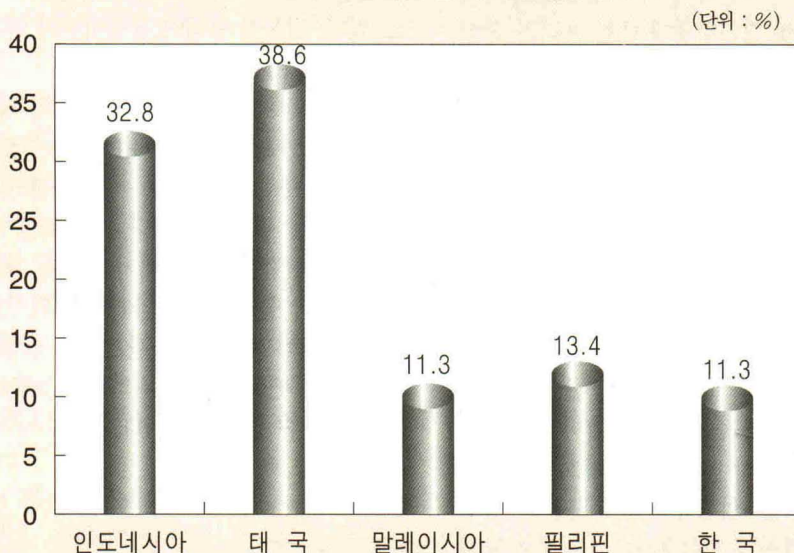
그러나 에스트라다 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 사건이 빈발하고, 치안이 악화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비판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경제구조조정을 이행해 온 국가와는 달리 필리핀은 이들 국가보다 경제개혁을 등한히 해옴으로써 투자심리 위축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여 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태국, 바트화 안정 위해 외환시장 개입

태국의 경우 98년말부터 38바트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바트화가 지난 5월 11일에 39바트를 넘어서고, 태국 중앙은행이 바트화 방어를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싱가포르 외환시장 관계자들의 언급이 유포되면서 환율불안정이 시작된 바 있다. 그동안 태국정부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설을 일축하면서 바트화의 약세가 태국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태국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그림 2〉 동남아 주요국의 부실채권비율(1999년말 기준)



주 : 태국의 총여신 대비 부실채권비율은 금년 5월말 현재 35.47%, 6월말 기준으로 32.01% 기록

자료 : 각국 통계 종합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바트화의 약세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 폭락에 영향을 받아 7월 5일 8개월 만에 최고치인 39.6을 기록하고, 7월 14일에는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40바트를 넘어섬으로써 동남아 통화약세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7월 27일 달러당 41바트를 넘어서자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태국은 IMF 체제하에서 경제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 속도가 지연되면서 아직도 부실채권 비율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고(〈그림 2〉 참조), 최근에는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정치불안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바트화 약세에 의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간접투자자금에 상당부분 주식시장에서 이탈되고 있어 7월 31일 현재 태국 증권거래소(SET)지수는 284.67(올초 대비 46%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 환율불안정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와 같이 동남아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은 근본적으로 대외적인 충격(global shock)보다는 대내적인 충격(local shock)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98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 기조가 유지되면서 실물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각국의 정치불안과 개혁부진에서 비롯된 통화가치의 급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와히드 대통령의 정치적 장애가 불확실한 가운데, 금융개혁이 지연되고 있

인도네시아는 政情이 불안한 가운데 금융개혁이 지연되고 있고, 필리핀은 개혁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도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바트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재발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남아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 최근의 통화가치 하락이나 주가하락을 막을 만큼 경제상황이 개선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에도 개혁부진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과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자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폐소화 가치 약세는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과 함께 대내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가중되면서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 오던 태국도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증대하여 바트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동남아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사회적 긴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구조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로서 이들 국가에 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적지만, 정국 불안정에서 기인하는 위기요인의 증대가 경제적 기초여건에 관계없이 국제시장의 예기치 못한 변화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의 성적은?

김영식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장

최 근 20세기를 결산하는 기초과학분야의 SCI성적표가 나왔다.

SCI란 미국의 민간 과학정보연구원(ISI)에서 국제 저명 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과학기술논문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을 말하는 것으로, 발표한 논문의 수와 그것을 인용한 논문의 횟수 등을 담고 있어 한 나라의 기초과학 수준이나 논문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SCI 순위는 16위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16위에 올라 있다. 지난 90년까지만 해도 기껏 2천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32~33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이제 는 그것의 5배 이상인 1만1천여

편을 발표하여 세계 16위 수준을 굳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3위 수준이며 대만·싱가포르보다 높은 순위다.

이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기초과학 육성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쌓아 온 기초연구 역량의 축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한 번도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온 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도 우리뿐이다.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정도로 계속해 나간다면 오늘의 중국이나 호주 수준인 10위권 진입도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논문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용지수(I·F: Impact Factor)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SCI저널에 인용된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용이 많으면

숫자가 커진다. 세계적인 과학잡지인 「사이언스」誌는 I·F가 대개 22~25 정도이고 「네이처」지는 25~29 정도다. 지난해 세계에서 I·F가 가장 큰 학술지는 의학분야의 임상연구 학술지인 「Clinical Research」誌로 51이었다. I·F가 51 정도라면 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최근 2년간 SCI저널에 평균 51회 인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국제 학술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SCI 발표논문은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가 8,500여편을 발표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를 한 일본 도쿄대와 6위를 한 교토대 그리고 7위를 한 캐나다의 토론토대를 제외하고는 10위권 대학 모두가 미국에 있다. 특히 상위 2개 대학이 발표한 논문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표한 논문

수보다 많고, 국내 10대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은 미국 하버드대 1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보다 적은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요 현주소이기도 하다.

세계 10대 논문발표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천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도쿄대와 교토대가 들어 있다.

선진서방 7개국(G7)이 전부 7위 이내에 있는 것을 보면 SCI는 연구역량을 가늠하는 한 척도로 활용하는 데 무리가 아닌 것 같다.

SCI로 국제 과학수준 파악 가능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이 갖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의 하나는 부족한 연구비를 따내는 것이다. 요사이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SCI 논문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커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SCI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땅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캐내듯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밝혀내는 과학의 분야별 발전추세와 연구흐름을 한눈에 파

악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모색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과학기술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어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좋은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기관이나 개인의 평가자료로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SCI 논문정보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국내논문은 연세대 이영욱 교수가 1994년 「Astrophysical Journal」에 발표한 헬륨형성의 진화모델로 95회가 인용되었고, 지난 한해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영남대 김영수 교수가 1995년 「네이처」誌에 발표한 크리스탈 구조 연구로 94회에 이른다는 사실 등을 알려 준다.

일부에서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컴퓨터나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술지에 게재하기보다는 권위있는 학술대회에 신속히 발표하는 경향이 있고, 또 게재 논문수를 한 연구원의 업적평가나 승진·과제 선정·인센티브에 활용해 나가게 되면 까다로운 학술지보다는 게재가 쉬운 학술지를 선택하게 되는 등 SCI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들어 이에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SCI는 세계적으로 저

〈표 1〉 세계 주요대학의 SCI 논문발표 순위(99년)

순위	발표기관(국가)	발표 논문수
1	하버드대(미국)	8,492
2	도쿄대(일본)	5,897
3	UCLA(미국)	4,870
4	워싱턴대(미국)	4,762
5	미시간대(미국)	4,513
6	교토대(일본)	4,365
7	토론토대(캐나다)	4,346
8	존스홉킨스대(미국)	4,327
9	펜실베이니아대(미국)	4,231
10	스탠퍼드대(미국)	4,104

명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술지마다 그 나름대로의 권위있는 편집회의 등을 거쳐 논문을 게재하기 때문에 함람미달의 논문이 게재된다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약한 것 같다.

이 외에도 SCI 인용지수는 논문에 어떤 오류나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면 이를 비판하기 위한 인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가설을 제시해도 인용도가 낮을 수 있다거나, 이론적인 논문보다는 실험적인 논문이나 분석·조사 형태의 논문이 더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고, 논문발표가 활발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인용도가 높게 나타나며 필자 자신과 관련 있는 논문이 더 인용되는 이른바 자기인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아마도 물분자가 한 순간에 크리스탈 구조로 얼어가는 Ernst Ising의 상변화 모델처럼 3차원에서 증명되기 전까지 이 모델을 인용한 논문이 8천건을 넘어선 것을 두고 지적하는 우려로 보이나, 이 분야 전문가들은 비록 수학적 해를 얻진 못했어도 Ising모델이 철의 순간 자화(磁化)현상 등을 규명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델로 인정하고 있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SCI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단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단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유용한 점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연구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대부분 연구지원기관에서는 연구과제를 심의할 때 논문의 수나 인용빈도가 지닌 몇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연구분야가 지닌 학문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SCI를 하나의 평가수단으로 활용할 뿐 본연의 연구목적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미국 이공계대학 상위 5개대의 5년간 논문발표수와 인용지수를 조사하여 분야간 상관성 분석을 통해 수학에서 1편의 논문을 내는 것은, 생물학이나 전기공학에서 4편을 내는 것과 같고 물리나 재료 분야에서는 8편의 논문을 쓰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연구의 양보다 질 높여 나가야

우리는 그동안 위기를 호기로 만들어 가며 1인당 국민소득 8천 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수출 또한

〈표 2〉 연구논문의 분야별 상관성 분석(예)

	이 학				공 학					
	수 학	생 물	화 학	물 리	전 산	기 계	항 공	전 기	화 공	재 료
FIF ¹⁾	0.28 (1)	20.50 (68)	34.32 (112)	15.99 (54)	1.08 (4)	2.42 (8)	0.80 (3)	3.37 (12)	6.31 (24)	9.47 (32)
FPN	0.46 (1)	1.90 (4)	6.60 (14)	4.31 (9)	0.95 (2)	1.88 (4)	1.15 (3)	1.92 (4)	2.78 (6)	3.70 (8)
JIF	0.63 (1)	10.79 (17)	5.20 (8)	3.71 (6)	1.14 (2)	1.29 (2)	0.70 (1)	1.76 (3)	2.27 (4)	2.56 (4)

주 : FIF(1인당 인용지수) = FPN(1인당 연평균 논문수) × JIF(학술지의 평균인용지수)

*FIF : Faculty Impact Factor, FPN : Faculty Paper Numbers, JIF : Journal Impact Factor

1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기초과학 수준 또한 세계 16위 수준에 이르는 등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여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커졌다.

이런 연유로 지금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하나쯤은 타오는 과학자가 나올 만하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경제규모 등 국력의 규모로 보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다. 우리와 인구가 거의 같은 호주에서도 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됐고 영국에서도 68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그러나 노벨상은 외형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나라 전체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앞선 데다가 탈 만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때 주어진다. 노벨상은 찾아오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벨상의 가치에 수상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듯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는 제품의 품격을 인정받는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외형에 걸맞는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 기초과학 수준도 논문편수 못지 않게 연구의 질을 높여 인용횟수에서 최소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앞서가도록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

이제 기술로는 눈에 보이는 제품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고, 과학

학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켜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자연스레 높아지도록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연구비 안정적 지원으로 연구의 질 제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국제사회에 과학적으로 크게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적으로나 인용횟수 면에서 더 많은 논문, 더 좋은 논문을 많이 내어 널리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첫째, SCI에 포함되는 국내 학술지 숫자를 크게 늘려 나가야 한다. 현재 SCI에 포함된 국내학술지는 20종이며 그 중 5종만이 SCI의 핵심저널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제 국내 학술지도 질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둘째, 국내학술지의 활용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에서 벗어나 EU지역처럼 연구활동이 활발한 이웃 일본이나 중국과 함께 아시아 저널을 공동으로 탄생시켜 인용빈도를 늘려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탁월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

표한 우수과학자에게 한 차원 높은 연구에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주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과학기술부가 연구의 질(인용빈도)을 높여 나가도록 신규로 '세계적 선도과학자 육성사업'을 착수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제 좋은 연구업적만 쌓아가면 10년 아니라 20년 이상까지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우리 과학자들도 인용빈도가 좀 더 큰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걸맞는 과학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해 눈을 밖으로 돌리고,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훌륭한 연구결과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미래 원천기술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겠다. ■